

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

2025. 3. 25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I. 수립배경 및 개요	1
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과제별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수립배경 및 개요

- **(수립배경)**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(공급망안정화법 제7조)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(법 제8조) 수립 필요

※ **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**(공급망안정화법 및 동법 시행령)

법 제8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령 제3조(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기획재정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- **(대상기관)** 「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상 정책방향 및 과제와 관련된 21개 부처·청 등에서 과제별·부처별 시행계획 작성

구 분	대 상 기 관
부 (10개)	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법무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
처·청 (8개)	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, 조달청, 우주항공청, 방위사업청, 산림청, 특허청, 질병관리청
위원회 등 (3개)	국무조정실, 국정원, 금융위원회

- **(포괄범위)** 기본계획 상 4대 정책방향·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133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및 15개 부처단위 시행계획

참고

제1차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 추진 체계도

기본
방향

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

목표

2030년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% 이하* 달성

* ('23년) 70% → ('27년) 60% → ('30년) 50% 이하

4대
정책
방향

①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

- ① 경제안보품목의 지정
및 취약성 점검
- ② EWS 고도화
- ③ 위기대응체계 확립

② 공급망 회복력 강화

- ① 공공비축 고도화
- ② 국내생산기반 확충
- ③ 수입선다변화 등 해외
공급망 구축



10대
정책
과제

③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

- ① 물류·사이버보안 등
공급망 인프라 강화
- ②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
및 보호

④ 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

- ① 공급망 안정화
대외전략 추진
- ② 양·다자 공급망 협력
네트워크 강화

2027년 까지 “55조원 + α” 재정·금융지원 추진

추진
기반

①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

② 공급망안정화기금 및
소부장특별회계

Ⅱ. 과제별 시행계획

1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

【 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】

1-1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취약성 점검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경제안보품목 지정·관리 체계화				
① 기준 체계화				
○ 공급망 리스크, 경제·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 체계화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② 절차 등 구체화				
○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관리 (경제안보품목 코드 신설 등 별도 관리체계 마련)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경제안보품목 HSK 코드 신설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③ 선도사업자 선정				
○ 연 2회 선도사업자 선정, 필요시 수시 선정				소관부처
2. 경제안보품목 취약성 점검				
① 취약성 점검				
○ 매분기(1등급), 매반기(2등급), 매년(3등급) 정기 점검 실시				소관부처
② 점검 후 환류				
○ 고위험 품목에 대한 '위기대응 행동계획' 마련				소관부처

1-2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(EWS) 고도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‘25	‘26	‘27	
① 부처간 연계 강화				
○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공급망 EWS 운영지침 마련				
○ 공급망 위기 선행 변수 발굴·모니터링				
○ 휴민트·테크닉 등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활용				국정원
○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				외교부
② 민·관 협력 강화				
○ 선도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채널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
1-3 위기대응체계 확립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① (평시) 예방 강화				
○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				
○ K-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				
② (위기시) 긴급대응				
○ 위기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등 대응체계 신속 가동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위기시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적용 추진				
				기재부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기준 체계화)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등급구분 기준인 공급망 리스크, 경제·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 체계화

분류	3단계 등급별 분류기준 체계화·명확화	
1등급 (高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上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上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별 상중하 평가 방식 ○ (1등급) ①②③ 모두 上 ○ (2등급) ①上, ②③ 중 上1, 中1 ○ (3등급) ①上, ②③ 모두 中 ※ ①②③ 각각의 명확한 상중하 기준 설정
2등급 (高·中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上~中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上~中	
3등급 (中 위험)	①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上 ② 국내생산, 대체수입 곤란도 中 ③ 경제·산업·민생 중요도 中	

※ 다만, 일부 기준에 미부합하더라도 외국정부의 수출통제 및 지경학적 위기 등으로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,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품목별 계량지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후 세부지표 구체화를 통한 품목 선정기준 가이드라인 마련, 부처 배포('25.2분기)
- ⇒ 세부지표 체계화를 통해 경제안보품목 전면 업데이트('25.6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절차 등 구체화)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·변경·해제
 -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시 갱신
 - 경제안보품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체계 신설 검토
 - * (예) 등급(1~3등급)-부처-산업·분야-품목 順으로 코드 부여·관리

2. 2024년 추진실적

- 「공급망안정화법」 시행(‘24.6월)을 계기로 약 300여개 경제안보품목 지정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경제안보품목을 최초 지정 後 1년 경과시점에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품목 전면 업데이트(기재부, ’25.6)
 - 中 수출통제, 美 新행정부 출범 등 변화된 대외적 여건 등을 고려, 산업 분야 경제안보품목 추가 지정, 해제 여부 등 검토(산업부)
 -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(’25.2월 시행)에 따른 ‘핵심자원’을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추가 지정 필요성 검토(산업부)
 - 핵심광물,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·부품 등의 경제안보품목 신규·추가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추진
- 품목 업데이트 확정 후 내부검토를 거쳐 별도 관리를 위한 코드 부여방식 확정 및 관리(기재부, ’25.3분기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절차 등 구체화)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·변경·해제
 -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구체적 파악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HSK(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) 코드 신설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이차전지·전기차 관련 소재·부품,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 공급망 안정화 관련 HSK코드 신설(24.11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경제안보품목 재지정('25.6월) 절차에 맞춰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HSK 코드 신설 필요성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경제안보품목별·부처별 선도사업자를 연 2회 선정*하고, 필요시 수시 선정

* ('24년) 품목 65개, 서비스 2개 항목에 97개 기업(품목 92 + 서비스 5) 선정
→ '25년부터 연 2회 정기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1차 선정(8월) 및 수시 선정(11~12월)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 품목 66개, 서비스 2개 항목에 99개*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

* 대기업 25개, 중견기업 30개, 중소기업 42개, 공공기관 1개, 협동조합 1개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연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 정기 선정, 필요한 경우 수시 선정 추진
- '25년 1차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2.14일 관계부처 합동 공고 하였으며 4.9일까지 선정 완료 계획

※ 하반기는 8월 공고(10월 선정) 예정

	단계별	기간	조치사항
1	공고·접수	2.14~3.14 (1개월)	(기재부) 2.14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→ (사업자) 안정화 계획서 제출 → (부처) 접수
2	적격여부 심사	~4.4 (3주)	(부처) 부처별 심사,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
3	선정·통보	~4.9	(부처)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

- ☐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중점지원 및 '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'에 따른 재정·세제·금융 등 우선 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취약성 점검) 경제안보품목 갱신에 맞추어 1등급은 분기, 2등급은 반기, 3등급은 1년 단위 정기 점검 실시
 - 품목별 위기발생 가능성 및 대응여력을 중심으로 점검
 - (위기발생 가능성) 시장 수급불안, 정치·외교적 문제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재외공관·정보기관 등과 협조하여 검토
 - (대응여력) 수입대체처 존재 여부, 국내생산 가능성, 비축 여부·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검
 - 대내외 환경변화 및 EWS상 이상징후 포착으로 긴급점검이 필요한 품목은 수시 점검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기재부 중심으로 1~2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민관합동 ‘공급망 점검회의’ 실시(기재부, '24.하반기, 총 10회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각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별 정기 점검 실시, 공급망 리스크 등 감안 필요시 기재부 중심으로 점검 추진(기재부)
 - 1년 단위로 품목관리카드 업데이트 추진(~'25년말)
 - 특히,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라 에너지·자원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점검·분석 최초 실시(산업부)
 - * §11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... 공급기관의 장에게...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·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점검 후 환류) 점검결과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고위험 품목은 위기 발생을 가정한 '위기대응 행동계획' 마련

○ 민·관 대응 역량을 총망라한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 검토*

* (예) 정부: 비축 확대, 국내생산 및 수입다변화 지원
민간: 재고 확대, 대체수입처 물색 등

○ 취약성 점검시 발굴한 과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

< 위기대응 행동계획(안) >

시간	위기 징후 탐지	수출통제 단행 (D day)	D+0~7일 (즉시 대응)	D+8~30일 (단기 대응)	D+2~n개월 (중기 대응)
계획 (예)	▶ 위기요인 및 발생유형 파악	▶ 통제대상 품목, 조치경위 파악 ▶ 민간 수급상황 등 경제산업 영향 파악	▶ 민간재고 활용 ▶ 수출국과의 국제협력	▶ 대체수입국 긴급수송 ▶ 차액·손실 지원 검토	▶ 해외자원협력 ▶ 기술개발 ▶ 국내생산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부처별 '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*' 수립 추진

* 「공급망안정화법」제28조(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경제안보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소관부처 차원에서 '위기대응 행동계획' 마련(기재부)

○ 필요시 각 부처의 '위기대응 매뉴얼' 등에 반영

- 고위험 에너지·자원 경제안보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매뉴얼 수립 추진(산업부)

1-[2]-1-1-①
1-[2]-1-1-②

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급망 EWS 운영지침 마련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부처간 연계 강화) 부처·기관별로 구축되어있는 공급망 EWS 연계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강화

○ 부처·기관별 정량·정성 정보를 수집·공유하기 위한 “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” 구축

* (내부망) 품목정보, EWS 점검결과 등 각 부처 정보를 한곳에서 실시간 확인
(외부망) 주요국 정책 동향, 기업 현지 정보 등 정성 정보 확충

○ 각 부처·기관별*로 운영 중인 EWS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**하는 ‘공급망 EWS 운영지침’ 마련

* 산업부 등 부처별 EWS, 외교부 재외공관EWS, 관세청(과세정보, 경보체계) 등

** 점검대상·주기·점검내용, EWS 정보의 보안 관리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 발주 및 국자원(행안부) 협의

* (’25.上) 계약 및 개발 → (∼’25.12월) 테스트·보완

○ 관세청, 산업부 등 부처별 EWS 연계 정보*의 범위, 방법 등 협의

* 과세정보 제공 범위 및 주기(관세청), 산업부 등 부처별 EWS 시스템 연계 범위·주기 등

□ EWS 운영 방법 및 절차*, 주요 품목의 선행변수*, 전산 시스템 매뉴얼 등을 반영한 EWS 운영지침 마련

* 점검대상·주기·점검내용, EWS 정보의 보안 관리 등

** 핵심광물, 식량 등 주요 품목 선정 및 선행변수 개발·모니터링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부처간 연계 강화) 부처·기관별로 구축되어있는 공급망 EWS 연계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강화

-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* 발굴 등 산업별·품목별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발굴·모니터링

* (예) ①핵심광물 : 주요 생산국 채굴량·생산량, 주요국 핵심광물 지정현황 등

②식량안보 : 국제선물가격, 글로벌 생산량, 재고량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수입액·물량지수, 무역이상값지수, 수입의존도 지수 등을 종합
→ 품목별 공급망 위험도를 조기 감지하는 소부장 EWS 구축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우리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진단·평가 지표 등 개발

-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국가자원안보 진단·평가를 실시하여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, 공급망 취약점 등 평가

* §10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·평가를 하여야 한다.

1.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
2.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
3.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
4.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
5.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·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** 등을 통한 공급망 위험 모니터링 강화

* 유관기관과의 경제안보 위험 모니터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 취약점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정보 등을 수집·전파

**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('23.8) 후속조치 및 핵심과제로서 '한미일 재외공관 EWS 연계협력 시범사업' 추진('24.7~)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한미일 재외공관 EWS 협력 시범사업 공관 대상 협의 지속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민관 협력 강화) 민간의 공급망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선도사업자와의 정기적 소통채널 구축

* 공급망안정화법 §15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해당 물자, 원재료 등에 대한 구입량, 가격, 생산량, 재고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축적한 공급망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과 최대한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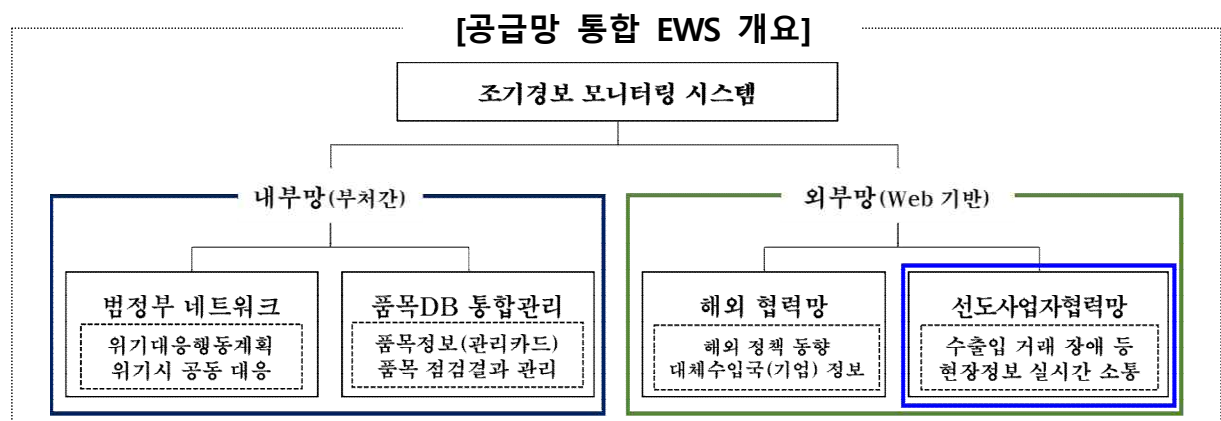
2. 2024년 추진실적

- 경제안보 품목 66개/서비스 2개에 대하여 99개*기업 선정

* 총 99개 중 대기업 25개, 중견기업 30개, 중소기업 42개, 공공기관 1개, 협동조합 1개

3. 2025년 시행계획

- EWS 전산시스템 구축 시 선도사업자 등 민간과의 정보공유 채널을 마련하여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



- 신속한 민간정보 공유를 위한 선도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

1-[3]-1-1-①
1-[3]-1-1-②
1-[3]-1-1-③

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
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
K-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평시: 예방강화) 위기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, 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및 공급망 충격 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
 - 기재부·국정원·외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의훈련 실시*
 - * 훈련품목 선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·위기대응 행동계획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체계 및 역량 평가
 -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,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
 - * 물가안정법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과 달리 공급망안정화법에는 처벌근거 부재
 - 공급망 충격 발생시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과 기업지원을 위해 공급망 EWS 구축과 연계한 K-공급망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급망안정화법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한 기재위 회부 법안 개요 작성 완료
 - 공급망안정화법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한 기재위 회부 법안 협의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기재부 주관 모의훈련 실시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마련
 - 기재부 주관 모의훈련(조달청 포함)을 연내 실시하여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모의훈련 정례화
-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'물가안정법'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 적용 명확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위기시: 긴급대응) 공급망 위기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, 위기 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 가동

○ 위키품목 지정 시, 해당 품목의 긴급수급 필요성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*도 신속 추진

* 공급망안정화법 제35조 ① 위키품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 가능

○ 공급망 위기 시 위기대책본부*를 설치·가동하여 긴급수급 조정조치, 긴급조달 등 위기 대응 조치 시행

* 특정분야·품목 위기 시 소관부처, 범정부 위기로 확대 시 기획재정부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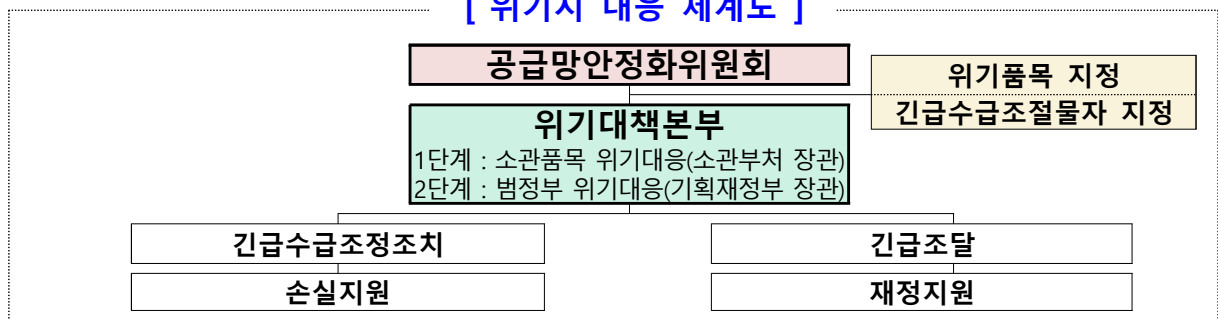
- 긴급조달*, 비축물자 적극 방출 등 단기 공급 안정화 조치 추진

* 위기발생시 긴급구매 대응을 위한 긴급조달자금 신규지원('25년, 100억원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실제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대책본부를 설치·가동하는 위기 대응 체계 마련

[위기시 대응 체계도]

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경제안보품목 점검·정비 이후 1등급은 분기, 2등급은 반기, 3등급은 1년 단위 분석 추진 및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실시

○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신규 비축 품목 발굴 시, (긴급)구매 자금(조달청)을 활용하여 대응('25~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위기시: 긴급대응) 공급망 위기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, 위기 품목 지정,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 가동
 - 공급망 위기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,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 적용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필요성 검토(상시)
 - 위기 발생시 할당관세 신속 적용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
 - '26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수립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검토('25.12)

2

공급망 회복력 강화

【 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】

2-1 공공비축 고도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①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				
○ 비축품목 선정·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비축품목 해제 필요성 정기적 검토				
○ 품목별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방식 모색				
○ 품목별 비축정보 EWS 반영				
② 공공비축 목표설정				
○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물량 확대 및 신규 비축품목 발굴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비축 목표 수정·보완				
③ 민간역량 활용 확대				
○ 타소비축 확대를 위한 보관료, 재고관리설비·시스템 구축비용 등 지원 검토				기재부
○ 민간 비축시설 신축 및 개·보수, 비축물량 확대 등에 필요한 금융·재정지원 추진				기재부
④ 비축 인프라 확충				
○ 조달청 비축기지 현대화·권역화 추진				조달청
○ 광해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준공				산업부 (광해공단)
○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광해공단 이관				산업부·조달청

2-2 국내생산기반 확충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국내생산 시설 확충				
① 투자단계 세제·보조금·융자 지원 확대				
○ U턴·외투기업이 국내투자시 기금을 통해 금융지원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, 지원비율 가산				산업부
○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				
○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				기재부

② 생산단계 보조금 지급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				
○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		기재부 (관계부처)		
2. 공급망 생태계 조성				
①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발굴·지정				
○ 소부장 특화단지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 10개 이상 발굴		산업부		
②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				
○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체계 구축		중기부		
○ 中企 선도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시 금리우대		기재부 (관계부처)		
○ 신·기보 보증료율 감면 대상에 선도사업자 포함		금융위·중기부		
○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강화 및 공급망기금 대출 연계 지원		중기부		
○ 공급망 관리 정책 대응 역량 강화 지원		산업부		
○ 산업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확대		산업부·중기부		
○ 공급망 ESG 통합플랫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		중기부		
3. 재자원화 지원				
① 법·제도정비				
○ 재자원화 원료의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, 별도 특수 분류체계 마련 등 재자원화 친화적 법·제도 마련		산업부 (관계부처)		
②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				
○ 재자원화 지원사업 도입, 클러스터 조성		산업부		
③ 실증지원				
○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운영		환경부		
2-3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				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수입선 다변화				
① 제3국산 수입지원				
○ 특정국 高의존 품목 지원(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)				산업부·기재부
○ 수입선 다변화시 금융지원(공급망기금, 수입보험 등) 강화				산업부·기재부
○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주기 컨설팅 지원				산업부

② P턴 지원 강화		
○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기금 지원 확대		기재부
○ P턴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강화		산업부
○ 제3국으로의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		중기부
2.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		
① 외국법인 지분투자 지원 강화		
○ 외국법인 지분 취득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 추진		산업부·기재부
○ 해외 M&A 정보 확보 및 국내기업 매칭 지원		산업부
②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		
○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		산업부·기재부·외교부
○ 공급망기금이 핵심광물 관련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등 민관 공동투자 추진		기재부
○ 공급망기금 및 민간의 직접투자에 대해 무보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일부 리스크 분담		산업부
○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공단의 직접투자 방안 등 검토		산업부
○ 첨단산업분야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검토		기재부
③ 안정적 식량 공급망 확보		
○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등 지원		농림부
○ 해외곡물 유통시설 투자비 등에 대해 저리융자		농림부

2-[1]-1-①-①
2-[1]-1-①-②

비축품목 선정·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
비축품목 해제 필요성 정기적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공비축 통합관리) 비축품목 선정·해제기준 마련,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
 - 경제안보품목 공공비축을 위한 품목 선정 및 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 수립
 - (선정)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축 품목 선정기준 마련
 - (해제) 비축 품목의 해제 필요성 정기적 검토*
- * 비축 품목 선정 기준, 품질 검사 등에 따라 비축 적정성을 평가하고, 이에 미달할 경우 비축 해제 여부 결정

2. 2024년 추진실적

- 분야별* 비축기준 마련(소관 부처) ⇒ 관계기관 의견 수렴, 비축기준 확정 및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반영(기재부)
- * 산업부(산업), 농식품부(농·수산), 식약처(의료), 방사청(방산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산업 환경 변화, 기술 발전 등으로 비축 해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, 비축기준에 따라 비축 적정성 평가 실시
 - 3년 주기*로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 적정성 검토(산업부)
- * ('22년) 금속비축종합계획 수립 → ('25년)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(2.7)에 따라 핵심광물 비축계획 재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실시
- 마스크 비축 목표량 재검토 등 적정성 평가 추진(조달청, 식약처)
- ※ 조달청은 5년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비철금속에 대한 비축 적정성 실시 ('27년 예정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공비축 통합관리) 비축품목 선정·해제기준 마련,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
 - 분야별 비축기준을 토대로 비축주체별로 품목별 비축계획 수립, 비축방식을 모색하고 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시각에서 종합 검토
 - 부처별 차년도 비축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마련(1~2월)하여 비축전문위원회 사전논의(3~4월) 후 기재부(예산실) 제출
 - 타소비축* 등 비축방식을 다양화하고, 비축물품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제도개선**도 추진
- *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, 수요기업이 보관 및 재고 순환
- ** 단건 구매방식 외 연간공급계약 도입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연간 공급계약 시범 도입(조달청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부처별 '26년 비축계획 수립* 및 비축예산 요구안 마련(~4월)
→ 비축전문위원회 사전 논의(5월 초) 후 기재부(예산실) 제출
 - * 비철금속, 핵심광물, 석유 등
-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, 구리, 주석에 대해서도 연간 공급계약 방식 확대 추진(조달청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공공비축 통합관리) 비축품목 선정·해제기준 마련,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

-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비축 현황·목표 등 품목별 비축정보*를 EWS에 반영하고 정보보안 강화

* 조달청(비철, 민생 등), 산업부(광해공단, 석유공, 가스공), 농림부(aT), 해수부(수협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비축 품목의 시장 동향 및 관련 뉴스 등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에 공유(조달청)

- 관세청과 협업하여 비축 품목에 대한 수입물가 지속 모니터링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EWS 구축 시, 관계기관 협의 및 품목별 비축 정보 반영 추진(기재부)

- 광해공단, 석유공사, 가스공사 등 비축기관을 통해 품목별 비축 현황 주기적(월 1회) 업데이트 추진(산업부)
- 비축물자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, 통합 EWS 구축 시 정보 연계 추진(조달청)
- 비축 품목 및 신규 비축 품목 등에 대한 수입물가 모니터링 협조 체계 유지

2-[1]-1-3-①
2-[1]-1-3-②

타소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 검토
민간비축 확대에 필요한 금융·재정지원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민간역량 활용) 효율적 비축물자 관리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 확대
 - 타소비축 및 민간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 마련
 - (타소비축) 보관료, 재고관리설비·시스템 구축 비용 등 지원 검토
 - * (現) 타소비축기업에 무상대여 및 입·출고료 지원(평시), 비축물량 일부 우선 구매권(위기시)
: 창고 무상제공, 품질·재고 관리 부담 등 민간부담이 커서 참여 유인 낮음
 - (민간비축) 비축시설 신축 및 개·보수, 비축물량 확대 등에 필요한 금융·재정지원 추진
 - * 경제안보품목 민간비축 확대를 위한 창고신축 개·보수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조달청 비축 중인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순환비 집행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 및 비축 안정성 확보를 위해 '26년 예산에 타소비축 보관료 신규 반영 추진(조달청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**(비축 인프라 확충)** 비축 효율성 제고 및 비축기지 현대화 추진

○ 조달청 비축기지 현대화*·권역화 추진

* 시설 개보수, 재건축,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비축 최적화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**(비축창고 신축)** 군산 비축기지 내 비축창고 2개동(14,636㎡) 신축 추진('25.4월 준공 예정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**(비축기지 현대화)**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 및 활용성이 낮은 경남 비축창고를 재건축하여 면적 확대 및 활용도 제고

* 사업 개요 : 창고 1개동(연면적 6000㎡), ('25) 설계, ('26~'27) 공사 시공

□ **(비축기지 권역화)** 중장기 공공비축 수요확대 대응을 위한 권역별 중대형 비축기지 구축 및 소형 노후화 창고 구조조정 추진

* '25년 비축기지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발주

○ **(권역화)** 현 비축 수요와 향후 비축 수요 잠재성을 고려하여 수도권, 중부권, 전라권, 경북권, 경남권 등 비축기지 권역화

○ **(구조조정)** 시설노후화 및 접근성이 낮아 재건축하더라도 활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 비축기지는 타용도로 전환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비축 인프라 확충) 비축 효율성 제고 및 비축기지 현대화 추진

○ 광해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 준공*

* 새만금산단 內 연면적 114,088㎡ 규모로 '27년 준공 예정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사업부지 매입, 타당성조사,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설계 단계 진입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'25년 중 비축기지 설계, 환경영향평가 등 비축기지 건설 착수에
필요한 행정절차* 진행

* 환경·재해(소규모)·교통영향평가, 설계적정성, 건축허가 취득 등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비축 인프라 확충) 비축 효율성 제고 및 비축기지 현대화 추진
 - 광해공단 비축기지 신축 일정을 고려,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'28년까지 광해공단에 이관 완료
 - * 연도별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('25~'29)에 반영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희소금속 1종(일부*) 광해공단 이관 완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희소금속 연도별 이관계획 마련*(조달청, 산업부) 및 '28년까지 이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재정·행정적 지원 적극 추진(산업부)
 - *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('25.1월, 기재부, 산업부, 조달청, 광해공단)
- ☐ 희소금속 3종 이관 추진
 - * '25년 이관을 위한 재포장 소요 234백만원 확보, 이관 예산은 광해공단 출자금으로 산업부 예산
- ☐ '26년 이후 이관 품목의 재포장 소요 예산 확보 추진(조달청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투자단계)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·재정·세제 지원 확대
 -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 및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지원*

* (예) 시설투자, 지분인수, 기술 확보 등 관련 포괄적 금융지원 제공

2. 2024년 추진실적

- '24.9월 기금 출범 이후 이차전지, 반도체의 국내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에 총 3건, 5,200억원 지원

* 포항·새만금 전구체 공장 건설 2,200억원, 구미 웨이퍼 설비투자 3,000억원,

3. 2025년 시행계획

- (U턴기업) U턴 유인 제공 및 국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망기금, 이차보전 등 패키지 지원 추진
 - U턴 기업이 주요*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시, 공급망기금 초저리(기금대출+이차보전) 대출 지원

* ① 핵심소재(이차전지 소재, 희토류, 무수불산 등) 생산설비, ② 광물제련 시설 등

- (외투기업) 선도사업자가 아닌 외투기업의 국내생산 시설 투자금에 대하여도 공급망기금 대출 적극 지원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투자단계)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·재정·세제 지원 확대
 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·증설시 외국인투자·지방투자 보조금 지원·확대
 -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비율 가산(최대 +10%p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·증설시 외국인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
 - (개선내용)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비율 가산(최대 +10%p)
 - *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 별표2
 - (추진현황) 고시 개정안 마련('25.1월) 및 관계부처 협의 진행중('25.1.21일~'25.2.6일)
 - (향후 계획)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·의결 및 공고·시행('25.3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투자단계)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·재정·세제 지원 확대
 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·증설시 외국인투자·지방투자 보조금 지원·확대
 - 선도사업자 등의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(소부장 특화단지입주기업 수준, +2%p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고시 개정안 마련
 - 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」 개정(안) 마련('24.12.30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선도사업자 등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신청시 지원비율(설비) 가산(2%p)
 - 지원기준 고시 개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(~25.1.26)
 - 고시개정 완료(25.1.31), 제도 시행(25.2.1~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투자단계)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·재정·세제 지원 확대
 -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들의 투자 촉진 지원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생산단계) 특정 高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·수입다변화·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
 - 공급망 위기발생시 경제·산업측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실상 대응수단이 부재한 경우로 대상 한정

【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(예시) 】

- ① (국내생산)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·구매 촉진 지원*
 - *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검토
- ② (수입다변화) 요소* 등 특정국 高의존 품목의 제3국 수입시 단가차액 지원
 - * 차량용 요소의 중국 外 제3국 장기계약시 수입 단가차액 지원('25년, 30억원)
- ③ (비축) 공급망 위기 발생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자금 도입*
 - *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1등급 경제안보품목의 긴급 비축확대 지원('25년, 100억원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中 수출통제에 따라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'차량용 요소'에 대해 中 外 제3국산 운송비 차액 50% 보조(산업부)
-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중국 外 수입대체처 발굴, 샘플 도입, 성능 평가 등 전주기 지원
(산업부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수입다변화·비축 관련 '25년 반영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(산업부·조달청)
-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및 예산 반영 추진(기재·산업부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)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는 다수의 수요·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협력모델 발굴·지정

* 특정 경제안보품목의 생산기업 뿐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국내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

- 소부장 특화단지별 밸류체인을 분석하여 단지 간 협력을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*을 10개 이상 발굴

* (예) 광주(자율주행차 부품) 및 대구(전기구동 부품) 간 협력 자율주행 셔틀 개발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후보 모집 실시('24.6.5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추진

* 범부처 위원회인 「소부장 경쟁력강화특위」 심의 후 규제 특례, R&D 등 지원

-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(4분기) → 신규 협력모델 승인

- 특화단지형 협력모델 공고 개시 및 후보 모집 추진

- 특화단지형 협력모델의 신청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공고(4분기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 추진계획(안) 마련
- 중소기업 협단체,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간담회
 - 중소기업 현장의견 수렴
 -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- 中企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대출 지원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경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기금 대출 시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*를 적용하고,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우대금리(기금마진 최소화) 적용

* 대기업 최대 $\Delta 0.8\%p$, 중견기업 최대 $\Delta 0.9\%p$, 중소기업 최대 $\Delta 1.0\%p$

- 중소기업인 선도사업자에게 8건 759억원 기금대출 지원

3. 2025년 시행계획

- '25년에도 선도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한 우대금리 지속 적용

- 공급망기금과 신·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'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'('25.1월 신설)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 경감

〈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(안) 〉

① 지원대상 : ①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 중소·중견기업, ②안정화사업의 협력기업

② 보증규모 : ('25년) 최대 2천억원 → ('26년~) 보증규모 확대 추진

- 우대 보증 대상기업에게는 별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기업 금융비용 경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-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 신·기보 보증 우대 지원*

* 보증료를 감면 등 우대 지원 대상에 공급망 선도사업자 포함((現) 소부장기업 대상 → (改)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 포함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 관련 기업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신·기보와 공급망안정화기금(수은) 간 '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' 체결('24.12.31)

- 선도사업자 및 그 협력기업,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기업*(이하 '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')의 보증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우대사항 협의

*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에 한함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우대지원 대상 확대 및 '공급망 안정화 지원 협약보증*' 시행

* 공급망안정화기금(수은)과 체결한 「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」을 통해 협약보증 마련

- (우대지원)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을 기술보증기금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증료 감면 혜택 제공(최대 0.4%p)

- (협약보증)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

세부과제	주요 내용	추진 일정			
		1Q	2Q	3Q	4Q
지원 대상 확대 및 협약보증 시행	▶ 신·기보 우대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 포함('25.1.23일)	○			
	▶ 공급망 안정화 지원 협약보증 시행('25.1.23일)	○			

- 보증과 대출을 연계하는 '공급망 안정화 지원 협약보증'을 통해 '25년 2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및 보증료를 감면 적용

- 협약보증 공급 및 최대 0.4%p 보증료 감면 혜택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
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-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대*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
중소·중견기업을 포함하고, 공급망기금 대출을 연계 지원

* 지원한도 상향 적용: (現) 2억원 → (改) 5억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경제안보품목 생산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

- 경제안보품목 및 선도사업자를 지정·관리하는 관계부처*와 협업
하여 지정품목 생산기업 전용 스마트공장 도입사업 추진

* 13개부처에서 291개 품목·3개 서비스 지정, 99개 선도사업자 선정('24년)

-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경제안보분야 부처협업형 스마트
공장 지원트랙 신설 ('25.下)

* 부처협업형 분야 확대 : (現) 8개부처, 10개분야 → (改) 경제안보분야 신설

* 필요시, 소관부처 및 기재부 협의를 통해 지원한도 상향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우리 중소기업들이 EU 공급망실사지침 등 주요국의 강화된 공급망 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
 -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급망 내 기업군의 탄소 감축 및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

2. 2024년 추진실적

- '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'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* 착수('24.11월~)

*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선정 '24년 '국민드림 프로젝트' 과제로서 추진

3. 2025년 시행계획

- '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'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(~'25.上)

- 공급망 내 기업군의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*('25.2월)

* '순환경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지원사업'('25.2.10~'25.2.21), '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'('25.2.4~'25.3.4) 등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중소기업 육성) 공급망 품목·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* 추진계획(안) 마련(~'25) →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('26~'28) 수립시 반영

- 우리 중소기업들이 EU 공급망실사지침 등 주요국의 강화된 공급망 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

- 공급망 ESG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사 온라인 자가진단 및 ESG 고위험군 협력 중소기업 현장 심층진단 지원

* 기존 중소기업 ESG 통합플랫폼을 확대·개편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 관리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기후공시,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**(제도정비)** 재생자원(사용후 배터리·E-Waste 등)을 활용한 자원 추출·재활용 등을 규율하고, 거래시장 조성을 뒷받침하는 법·제도 정비

-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*, 별도 특수 분류체계 마련 등 재자원화 친화적인 법·제도 마련

* 핵심광물 추출용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검토

※ 안정적인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“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개선 방안” 마련(관계부처 합동, ‘25.上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통계청 특수분류 개발대상 심의 통과(‘24.12월), 주요 품목 할당 관세 신청(‘24.11월) 등 국조실·환경부와 규제개선 협의 지속(산업부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특수분류 지정, 순환자원 확대·수입규제 완화 및 주요 광종의 할당관세 품목 선정 추진

* 통계청, 환경부, 기재부 등 상기 내용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

- ‘수출입 폐기물 관리지침’ 개정(환경부) 추진(‘25.上)

- 수입이 금지된 일체형 폐전기전자제품*에 대한 수입을 일부 허용하는 등 수입 규제 합리화

* (기존) 국내 폐기물의 회수·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 수입 금지
(규제합리화) 유가금속·자원의 회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재활용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(산업용 및 소형 가전제품 등)은 수입 금지 제외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산업 육성) 재자원화 지원사업 도입* 및 소부장·첨단 특화단지와 연계한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

* 시설투자 보조, 재자원화 원료DB 구축, 통계조사,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 간담회(1차: '24.4월, 2차: '24.10월), 클러스터 설명회('24.3월), 지자체 협의('24.6월 등) 등을 통한 의견수렴 추진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책 발표 및 재자원화 지원사업·클러스터 관련 예산 확보
 - (정부시책)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 지원사업, 클러스터 조성, 규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부정책 마련('25.上)
 - (예산 확보)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사업, 재자원화클러스터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신청, 적격성 심사 등 추진
 - (클러스터 지정)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 및 후보지 관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('25.下), 재자원화클러스터 지정 추진('26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실증지원) 폐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* 운영을 통해 실증비용(최대 1.2억원)·책임보험료(최대 2천만원) 및 사업 컨설팅 지원

*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→ 규제 면제·유예 → 시장 출시 및 시험검증

【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(23.11월) 】

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(6.27, 12.12) 결과, 총 9건* 규제특례 부여 및 30건의 신속처리 결과 통보

* 특례 9건 중 공급망 관련 ▲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, ▲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등 3건 해당(1건은 사업개시, 2건은 준비중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新산업 발굴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제3국 수입지원)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·재정 지원 및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

-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,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* 또는 운송비 지원**

* (예) 차량용 요소: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% 보조('25년)

** (예) 원유: 非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(~'27년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中 수출통제에 따라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'차량용 요소'에 대해 中 외 제3국산 운송비 차액 50% 보조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'차량용 요소' 제3국산 차액 보조 사업을 운송비 → 수입단가 차액 보조(보조율 50%)로 확대·개편

- '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' 신설 등으로 대상 품목 확대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제3국 수입지원)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·재정 지원 및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

○ 자체적으로 대체 수입처 발굴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이 어려운
중소·중견기업 대상 수입처 다변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*

* 대체 수입처 발굴 → 샘플 수입 → 샘플 성능검사·시운전 등 쏘주기 지원(KOTRA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중국 외 수입대체처 발굴, 샘플 도입, 성능 평가 등 지원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최대 10개사 지원 (사업공고, '25.1월~)

* 품목별 중요도, 수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업 선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P턴 지원)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 설비를 신·증설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경제안보품목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및 해외 정책금융기관*과 협업을 통한 공동지원 추진

* 美 DFC(국제개발금융공사), 日 JBIC(일본국제협력은행), 호주 EFA(수출금융공사)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경제안보품목 확보를 위한 3국 생산시설 투자(해외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포함)에 대하여 공급망기금 대출 적극 지원

☐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대출 외 직·간접 투자도 적극 추진

- 수출입은행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('25.7월)
-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,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*'를 구성하고, 민관 공동투자(직접투자 + 펀드) 추진

* 제1차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 개최('25.2.18일 기재·산업·외교부, 수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 등 참여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P턴 지원)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 설비를 신·증설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P턴 기업 대상 컨설팅(현지 시장 조사, 인·허가 등) 지원* 강화

* KOTRA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센터에 전담 데스크 운영·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최대 5개사 지원 (사업공고, '25.1월~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P턴 지원)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 설비를 신·증설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- 해외투자 절차 파악,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제3국 진출 역량 보완을 위해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*

*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법인설립 지원(임차료 등), 판로개척 지원(마케팅 등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'25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함께 해외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*

*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현지화, 판로개척 등 지원

< 지원내용(예시) >

세부 유형	프로그램 내용(안)
현지화	■ 해외 현지화 지원 - 대기업의 네트워크 또는 현지 거점 인프라를 활용한 현지화 지원 ① (제품현지화) 현지 규격 인증 획득, 제품 현지화, 제품 현지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등 ② (해외실증(PoC)) 해외 바이어 대상 중소기업 제품 현장 시범설치·운영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후속 사업 연계 지원 ③ (법인설립지원)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자문, 인·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, 현지 법인·공장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 및 용역
판로 개척	■ 해외판로 개척(마케팅) 지원 - 대기업의 인프라 또는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·마케팅 지원 ① (공동전시회)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Booth in Booth 형태 공동전시·홍보 활동 참가 통한 중소기업 해외 인지도 제고 ② (수출상담회) 대기업의 네트워크 및 영업망을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③ (마케팅)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홍보·마케팅

- (추진일정)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(2월)
→ 과제 모집공고 (2월, 5월) → 과제 수행 (~12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,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
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* 추진

* (現) 소부장 품목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 취득 및 사업 양수시 법인세
세액공제(인수금액의 5~10%) → (改) 적용품목에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,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
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품목을 추가토록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('25.3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국내 M&A 지원단체(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, KOTRA) 등을 통해 해외 M&A 매물 정보 확보·분석 및 국내기업 매칭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전략기술 정보제공 및 기술검증지원(산업부)

3. 2025년 시행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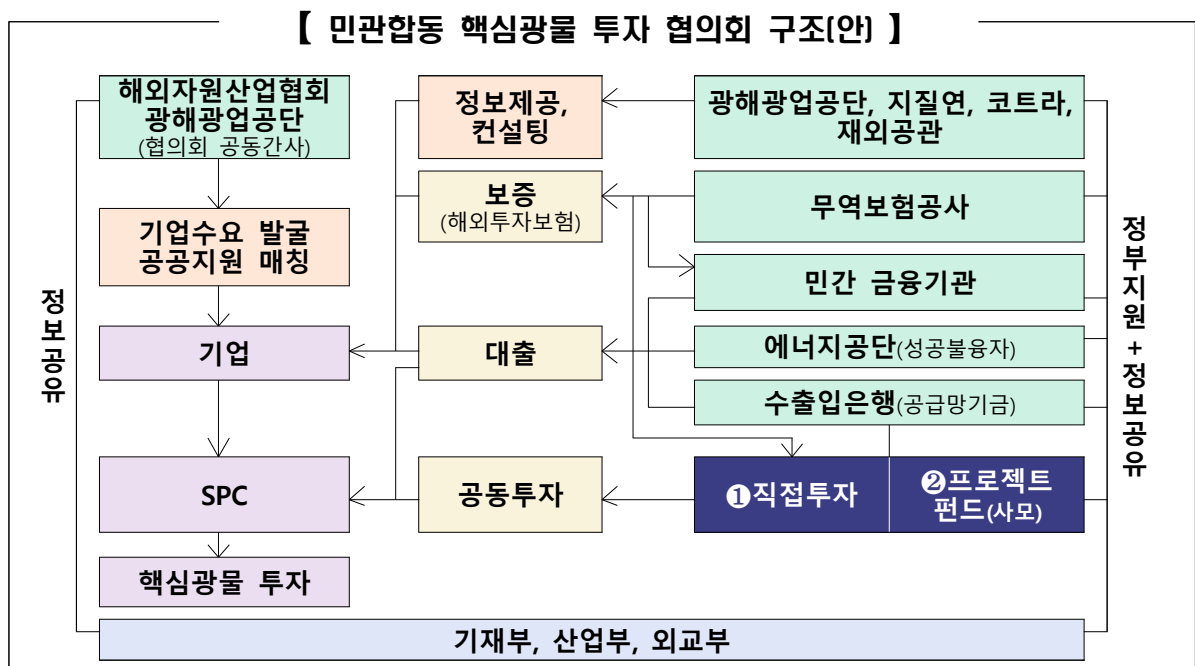
- 환경규제·경제성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민간 자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(산업부)
- (매물 발굴)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의존도 등을 분석하여 관련 매물 발굴을 추진
- (전략수립지원) 공급망안정화 대상기업 인수추진 시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광물)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 수행

○ 민관합동으로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'를 구축*하여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·컨설팅 및 대출·투자·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

* 기재·산업·외교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, 수은 등 참여



- 민간·공공의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국내외 정보 공유*,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공동탐사 등 지원 강화

*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등 신규 사업정보를 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유

- 민간 수요 발생시 공동투자·대출·보증 등 패키지 지원* 추진

* (공동투자)공급망기금 (대출)에너지공단+공급망기금 (보증)무역보험공사 등

【 사업단계별 중점 지원방향 및 예시 】

- (탐사단계) 광해공단 공동탐사, 정보제공 및 컨설팅, 성공불용자(대출) 등 중심 지원
- (개발단계) 공급망기금을 통한 공동투자, 무보의 보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리스크 부담 완화
- (생산단계) 정부차원 물류 원활화 협의 및 운송비 등 관련 자금소요(대출)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 및 운영

- 1분기 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을 위한 키포프 회의 개최('25.2)
-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
-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관련 정보공유, 민간의 광물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등 민관간 소통 창구로 활용

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조사·용자 등 지원사업 연계방안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광물)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 수행
 - 공급망기금이 500억원 수준에서 민관 공동투자*를 추진('25년) 하고, 연도별로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·장기투자 추진
- * (직접투자) 민간수요 따라 기업과 함께하는 직접투자 추진
(간접투자) 프로젝트 펀드(사모)에 앵커투자자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 유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기금의 지원방식 다각화, 투자업무 고도화 등을 위해 '투자 자문단' 구성* 및 운영 개시('24.12월)
 - * 내·외부 투자 전문가 6인으로 구성
- 창의적 직·간접 투자 지원방안 모색, 개별 투자건 심사·승인 등에 대해 필요시 자문 청취 등 목적

3. 2025년 시행계획

- 민관합동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' 참여를 통해, 핵심광물 관련 사업성 있는 핵심광물 투자 사업 발굴 추진*
 - * 해외자원산업협회, 광해광업공단, 에너지공단, 지질연, 코트라 등의 협조를 통해 민간·공공의 핵심광물 투자 사업 발굴
- 협의회가 사업성을 평가한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절차를 거쳐 '25년 중 500억원 수준에서 민관 공동투자 추진*
 - * (예시) (협의회) 사업성 검증 → 기금 지원대상 요건(선도사업자 선정 등) 충족 → (수은) 상담 및 투자조건 협의 → (수은) 금융심사 →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광물)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 수행
- 공급망기금 및 민간의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보험(무보)을 통해 무보가 일부 리스크(비상위험)를 분담*하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
 - * 투자대상국에서의 비상위험(수용전쟁·송금 위험, 약정 불이행 위험 등)으로 손실 발생시 보상
 - 공급망기금 핵심광물 투자시 감사원 사전컨설팅,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면책추진* 등 적극행정 유도
 - *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공급망기금 투자에 대한 면책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해외투자보험을 통한 핵심광물 투자 사업 선별 지원 예정
- ‘핵심광물 투자협의회’ 등을 통한 해외투자보험(비상위험 담보) 지원 수요 발생 시, 사업성 등 검토하여 선별적 지원
 - 해외 광물투자사업(생산단계)의 참여기업 요청 등 수요가 있을 시, 핵심 광물 투자협의회를 거쳐 해외투자보험* 지원
 - * 전쟁위험, 소요 위험 및 수용위험 등으로 인해 투자상대방이 손해를 입어 사업 불가능의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
 - 또한, 현지실사, 외부전문가 리뷰 등 사업성 등 해외투자사업 안정성, 지원 필요성을 정밀 검토하여 선별* 지원
 - * 투자대상국의 높은 위험성 등 감안 시 무역보험기금 기금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면밀히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광물)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 수행

○ 민간수요 및 대외환경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, 필요시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* 등도 검토

*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물투자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광해광업공단의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추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광물)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중물 역할 수행
 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검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핵심광물의 특성, 자원보유국의 제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확대 범위·방식 등 검토

1. 과제 설명

-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추가 거점지역을 발굴*하고, 탐색·진출·정착 단계별 전주기 지원** 강화

* (현행) 연해주, 동남아 위주 진출 → (확대) 미주, 독립국가연합(CIS), 오세아니아

** (탐색) 현지 환경조사 및 교육 지원 → (진출) 농지임차, 장비구입 등 시설·운영자금 융자 지원 → (정착) 재배기술, 경영개선 등 컨설팅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해외농업 진출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, 정보제공, 민간환경조사·컨설팅, 교육 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

* 예산 97억원(융자 67, 보조 30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
 -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전략품목을 확대하고, 전략품목 분야 진출기업 우선지원
 - * (전략품목) (기존) 밀 콩 옥수수, 오일팜 카사바 → (확대) 밀 콩 옥수수, 오일팜 카사바 배추
 - * (융자) 전략품목의 경우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비의 70%이내 지원, (보조)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, 민간환경조사, 컨설팅 등 추진시 전략품목 가점부여
 - 극동영농지원센터, 전문관을 활용한 해외 현지 맞춤형 지원, 해외농업과 국제협력사업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진출지역 다변화

1. 과제 설명

-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국제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업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 등 지원

* '25년 지원규모 : 500억원 / 융자(이차보전, 연리 2% 또는 변동금리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대상자 선정을 진행 하였으나, 국제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업체 미선정

3. 2025년 시행계획

- '25년 해외곡물망 확보 융자지원 사업으로 지속 추진
 - 국제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사업 추진
 -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 안내·홍보 강화
- * 지원 가능 항목 확대, 절차 강화 등 사업 개선 방안 탐색

3

경제안보 기반 고도화

【 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】

3-1 물류·사이버 보안 등 공급망인프라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	
	'25	'26	'27		
1. 해운물류 인프라 강화					
① 해운인프라 확충					
○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공급망 분석				해수부	
○ 해외 물류거점별 물류센터터미널 등 인프라 확보					
② 장기운송 확대					
○ 장기운송계약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				해수부	
③ 물류 수급지원					
○ 컨 박스 수급을 위한 투자·보증 등 금융지원				해수부	
④ 국제기준 선도					
○ 저·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및 녹색항로 구축				해수부	
2. 항공물류 인프라 강화					
①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					
○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				국토부	
○ 물류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				국토부·중기부	
②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					
○ 글로벌 운수권 지속 확보·배분 및 외국 화물 항공사 국내 유치				국토부	
○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국내 유치 및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 지원				기재부·국토부	
③ 연계물류					
○ 주요 거점에 국제물류특구 조성				국토부·해수부 등	
3. 사이버 보안 강화					
① SW공급망 보안					
○ 범정부 SW 공급망 보안 TF 구성, 'SW 공급망 보안 제도'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 마련				국정원· 과기부 등	
○ 정부 조달과정에서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 제도· 지침 개정 및 신뢰성 있는 공급업체 지정 방안 마련				국정원	
○ SW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 구축 지원 및 개발 환경 전반에 보안점검·컨설팅 제공				과기부	
○ 금융권 SW 도입·운영 관련 보안 체크리스트 마련				금융위	
② 美·英 등 주요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지속					국정원·외교부
③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 및 육양국 다변화 추진					과기부
④ 필수금융 서비스 안정성 확보					
○ 업무위탁 확대에 따른 핵심기반시설의 리스크 점검 및 핵심기능 유지				금융위	
○ 개별 금융회사의 자금인출, 송금 등 안정적 금융 거래 제공 위한 위기대응역량 제고				금융위	

3-2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				
① 공급망, 경제·안보 핵심기술 R&D 지원 강화				
○ 공급망, 경제·안보 핵심기술 R&D에 대해 3년간('25~'27년) 25조원 이상 지원 추진				과기부·산업부 등
○ 경제·안보, 공급망 밀접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				과기부·산업부
○ R&D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 추진				기재부
○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핵심기술 점검·발굴				과기부·산업부
② 기술경쟁력 기반 조성				
○ 중소기업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 및 사업화 지원				특허청
○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등 지원				특허청
③ 첨단산업 분야 주요국과 기술협력 확대				
○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 R&D 확대				산업부
○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 등 참여				과기부
2. 기술유출 방지 등 기술보호체계 강화				
① 정책·제도 개선				
○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				산업부·과기부·기재부·특허청
○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포착				특허청
○ 스타트업·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				중기부
② 기술유출 법집행 강화 및 국제공조 지속				
○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등 정보공유				법무부·산업부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해운인프라)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 공급망 현황 분석
 - 특정 항로 봉쇄시 대체항로 정보, 운항시 발생가능한 위험 정보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민간과 공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공급망 충격 사례 분석 및 수입 항로별 해운 공급망 분석·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5년.下~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해운인프라) 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 지원 등 해외 항만 인프라 확충

○ 글로벌 물류·공급망 투자펀드(해진공 등) 조성 및 민관합작 투자 (항만공사 등) **활성화**로 해외 주요거점별 물류인프라 지속 확충*

*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'32년까지 16개소로 확대

○ 부산항 연계 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·운영권 확보 추진

* 미국 최대의 해상화물 Gateway인 뉴욕/뉴저지(동부) 항만과 LA/LB 항만 (서부)에 국적 원양선사의 터미널 지분확보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민관합작 물류센터 추가확보(4개소)*,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(10건), 해외물류자산 확보를 위한 정책펀드(1조원) 조성

* 미 LA 롱비치 개장(24.9), 미국 엘우드·시카우커스 착공(24.9~10.) 인니 프로볼링고 개장(24.9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'K-물류TF' 구성·운영

□ 「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 전략 마스터 플랜」 수립하여, 해외 현지 거점 및 물류인프라 확대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장기운송 확대) LNG·원유 등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선·화주*에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

* 컨테이너 정기선에서 부정기선(벌크·가스선 등)까지 우수 선·화주 인증대상 확대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장기운송계약 체결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선정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장기운송계약 체결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추가 선정 및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 추진

- ☐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일몰 연장('25.12월→ '28.12월)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물류 수급지원)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수급 지원을 위한 투자·보증 등 금융지원* 지속 제공

*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박스 수급시 금융리스 계약 등을 통해 선사의 비용부담 경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안정적인 ‘컨’박스 확보 및 리스비용 절감 통한 국적선사의 원가경쟁력 제고 위하여 공사 금융지원 제공

- 국적선사의 원활한 ‘컨’ 박스 운영을 위해 해진공 소유 ‘컨’ 박스를 HMM에 경쟁력 있는 신규 금융지원(\$1.38억, 약15만대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국적선사의 유동성 확보로 대부분의 선사가 자체적으로 ‘컨’ 박스 수급 예상되며, 추후 해운산업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적극 지원

- (지원수요) 현재까지 ‘25년도 신규 ‘컨’박스 금융지원 수요 없으나 지속 모니터링 수행 예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국제기준 선도) 메탄올·전기·암모니아 등 저·무탄소 선박 기술개발*, 시험 인프라 및 녹색항로구축**을 통해 해운 탄소중립 IMO 국제기준 선도

*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R&D(2,540억원, '22~'31)

** 녹색항로를 위한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및 국제협력 기반 R&D(299억원, '25~'28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(기술개발) 선박 폐열 활용 발전 시스템 제작 및 30MW급 전기 추진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착수 등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추진
- (녹색해운항로) 한-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연구('24.4~12), 녹색해운항로 확대를 위한 실무협약(호주·싱가포르·덴마크 등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(기술개발) 30MW급 전기추진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및 선박용 수소연료전지, 암모니아 활용 기술 등 개발 추진
- (녹색해운항로) 한-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수립·이행, 호주·싱가포르·덴마크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MOU 체결 추진
 -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(R&D) 사업 추진

1.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 계획

□ **(국내 인프라)** 국내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를 지속 추진

○ 항공물류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

* (총 사업비) 1,215억원 / (공사기간) '25 ~ '28 / (면적) 30,457m²

○ 반도체 등 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, 中企의 항공물류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* 구축

* 인천공항·중진공 협력,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 內 약 18,500m² 공동 개발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**(스마트 화물터미널)**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내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성 검증 완료('24.8)

□ **(물류기업 유치)**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설공사 착공('24.12) 및 AACT* 제3화물터미널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 준비

* 아틀라스항공(美)과 지상조업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(韓)가 공동출자한 운영사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**(스마트 화물터미널)** 시범사업 설계 착수 및 운영사업자 선정('25.上), 실무협의체* 운영 및 프로세스 간소화 방안 도출 등

* 관세청, 공항공사, 항공사, 포워더 등

□ **(물류기업 유치)** 제2물류단지 현대글로벌 스마트 물류센터 준공 및 운영개시('25.5) 및 제1물류단지 잔여부지(P2) 실시협약 체결('25.2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국내 인프라) 국내 항공물류 인프라 현대화를 지속 추진

- 반도체 등 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, 中企의 항공물류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* 구축

* 인천공항·중진공 협력,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 內 약 18,500m² 공동 개발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물류센터 및 물류설비 상세 설계 완료('24.8월) 및 물류센터 착공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물류센터 내 물류설비 제작 및 설비설치 개시

1.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 계획

- (글로벌 네트워크) 신규 노선 취항 및 외국 화물항공사·물류센터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 추진
 - 항공회담 등을 통해 글로벌 운수권을 지속 확보하고, 신규 외국 화물항공사의 국내 유치도 지속 추진
 -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(GDC*)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,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 기금 지원
- * 글로벌 물류센터(Global Distribution Center):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입·보관후 재포장·배송(인천공항: 로지스밸리('26), 현대글로벌비스('25), 쉐커킨코리아('23) 등 9개사 GDC 유치)

2. 2024년 추진실적

- (운수권 증대) 체코·인니 등 총 19개국과 항공회담 개최 및 운수권 신설·증대, 年 2차례('24.5, '24.11) 운수권 배분으로 신속한 취항·증편 지원
 - * (예) 지방發 울란바토르 증편('24.5~), LCC 발라바탐 신규취항('24.11~), 시드니 증편('24.11~) 등
 - 특히, 지방공항발 운수권 다수 확대* 및 일부 노선 취항까지 지원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및 국민 이동편의 지원
 - * (몽골) 지방/부산-울란바토르 각 주3회 신설 (우즈벡) 지방-타슈켄트 및 지방공항간 각 4회 신설 (튀르키예) 지방-이스탄불 주3회 신설 (인니) 지방-자카르타발리 신설 지방공항 간 자유화
- (네트워크 강화) 국내 항공·물류기업과 2024 항공화물포럼^{TIACA} 인천공항관 공동운영('24.11, 美 마이애미) 통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

3. 2025년 시행계획

- (항공회담 개최) KE-OZ 기업결합('24.12),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항공회담 지속 추진
- (항공사 유치) '특수항공화물 운송품질 국제인증(CEIV)' 갱신 관련 해외 공동 마케팅* 활동 시행(Air Cargo Europe, '25.6, 뮌헨)
 - * 항공사·물류기업 등과 팀코리아 결성, 인천공항 강점 위주 마케팅 추진
- (GDC 유치) 글로벌 기업 인천공항 GDC 유치를 위한 One-stop 컨설팅 프로세스 구축(투자절차, 관계법령 등 종합 안내체계 등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글로벌 네트워크) 신규 노선 취항 및 외국 화물항공사·물류배송 센터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 추진

-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(GDC*)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,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 지원

* 글로벌 물류센터(Global Distribution Center):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입·보관후 재포장·배송(인천공항: 로지스밸리('26), 현대글로벌비스('25), 헥커코리아('23) 등 9개사 GDC 유치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공급망기금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거점 물류자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 수출입 공급망 경쟁력을 제고

□ 해양진흥공사, 항만공사, 코트라 등 해운·물류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사업 발굴, 공동지원 등 추진

< 국내외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 예시 >

시설자금(1)	시설자금(2)
<p>A사의 국내 LNG 터미널 건설사업 ▶ 건설자금의 90%까지 지원</p> <pre> graph LR A[해외 가스전] --> B[LNG 터미널 건설·운영사] B --> C[국내에너지 기업 등] D[국내 LNG터미널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] --> B E[공급망안정화기금] --> D </pre>	<p>B사의 해외 물류센터 건설사업 ▶ 건설자금의 90%까지 지원</p> <pre> graph LR A[국내 양극재 제조사] --> B[해운사] B --> C[해외 물류센터] C --> D[국내 배터리기업 현지공장] E[해외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] --> C F[공급망안정화기금] --> E </pre>
투자자금	운영자금
<p>C해운사의 해외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사업 ▶ 지분인수액의 90%까지 지원</p> <pre> graph LR A[C해운사] -- "지분 인수" --> B[해외 거점 터미널 운영사] C[지분 인수자금] --> A D[공급망안정화기금] --> C </pre>	<p>D항만공사의 스마트 항만 운영 사업 ▶ 1회전 운영자금 지원 또는 추정 매출액의 50% 이내 지원</p> <pre> graph LR A[D항만공사] -- "스마트 항만 서비스 제공" --> B[수출입, 환적 고객사 (선주, 화주 등)] C[스마트 항만시설 관리·운영자금] --> A D[공급망안정화기금] --> C </pre>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연계물류) 항공·해운·육상 복합 운송체계 강화를 위해 공항·항만·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국제물류특구* 조성

* 공항·항만 등 물류거점 인근 물류·산업용지 조성, 기업친화적 규제특례 허용 등을 통해 물류에 기반한 제조·R&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(국제물류특구) '24.3월 민생토론회(인천)에서 '국제물류특구 조성 추진' 등을 담은 '항공·해운·물류 발전방안' 발표, 법안 제정 추진* 중

* 부산글로벌허브도시법(9.2일 행안위 상정), 국제물류진흥지역법(8.21일 국토위 상정)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국제물류특구 법안 제정 추진('25. 下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SW공급망) SW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 구축, SBOM* 도입 및 금융권 SW 공급망 점검

* (Software Bill of Materials: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) 소프트웨어 별로 구성 요소의 라이선스, 버전, 패치 상태 등을 명시하여 보안 강화에 기여

○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SW 공급 중단 등 보안 위협에 대응

-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권 SW 도입·운영관련 보안 체크리스트*를 마련

* SW 도입 시 보안정책절차, SW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고려사항 등을 제시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SW 도입·운영 시 보안사항을 자체 진단 후 보완에 활용할 수 있는 '금융권 SW공급망보안 자율점검 체크리스트' 개발·배포(금융보안원, '24.11월)

< 금융권 SW공급망보안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>

단계	주요내용
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입 보안요구사항 정의 및 현행화 여부 점검 - 공급사, 개발사의 신뢰성 및 자체증명 검토 등
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패치 - 업데이트, 패치의 안정성 검토 - 공급망 침해·재해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- 공급중단 대체 방안 검토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금융회사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 개선 사항 도출

○ SW 공급사 자체증명 실효성 제고 등 보완 예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**(해저 통신케이블)**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회* 구성·운영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육양국 다변화** 추진

* 관계부처·산업계 등으로 구성,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의 안전·보안 강화방안 등 협의

** 해저케이블을 육지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국사(육양국)를 부산·거제 중심에서
他지역으로 확대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해저 통신케이블 민관협의회 운영 및 육양국 다변화 추진
- **(민관협의회 운영)**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·보안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사항* 발굴, 산업계 의견수렴 진행
 - * 해저 통신케이블 육양국의 물리적 보안 강화,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 등
 - **(육양국 다변화)** 국내 해저 통신망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신규 케이블 설치 시 부산 외 지역에 육양국을 설치하도록 권고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필수 금융서비스) 핵심기반시설 및 금융회사의 업무 중요도별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

○ (핵심기반시설*)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를 점검하여 결제, 청산, 정보관리 등 핵심 기능 유지

* 시스템 중단이 국가경제 및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불가능한 시설
(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금융감독원, 보험개발원, 신용정보원)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핵심기반시설 기관 및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협의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금융분야 핵심 금융기반시설의 인프라의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자체평가 실시('25.2~3분기)

○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범사례 도출 및 개선사항 검토 ('25.4분기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필수 금융서비스) 핵심기반시설 및 금융회사의 업무 중요도별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

○ (개별 금융회사) 자금인출, 송금, 대출 등 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적 침해 차단 등 위기 대응 역량 제고

* 금융회사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및 금융권 합동 비상대응(재해복구)훈련 실시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금융권 합동으로 전자적 침해 차단 관련 재해복구훈련 실시('25.8~9월)

3-[2]-1-1-①	공급망 R&D에 대해 3년간 25조원 이상 지원 추진
3-[2]-1-1-②	경제·안보, 공급망 밀접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
3-[2]-1-1-③	R&D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기술 범위 확대 추진
3-[2]-1-1-④	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기반 자금조달 및 사업화 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R&D 지원) 공급망, 경제·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&D에 대해 3년간('25~'27년) 25조원 이상 지원 추진
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경제·안보, 공급망 안정화 밀접 기술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

【 주요 추진과제 】

분야	핵심 추진과제
①소부장 핵심전략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급망 산업원천소재 기술개발 예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부장 경제안보품목(185개, 산업부) 핵심 소재의 대체(Replace), 저감(Reduce), 재자원화(Resource) 등 3R 기술개발 <div> Replace: 기존 기술의 Break-through를 위해 혁신적 산업원천기술 및 양산기술개발 Reduce: 특정국 고의존 핵심소재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혁신공정기술개발 Resource: 폐자원으로부터 고품위 원소재 확보를 위한 고난이도 전처리기술개발 </div>
②국가 전략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제·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3대 게임체인저 기술(AI·반도체, 첨단바이오, 양자) R&D에 집중 투자
③국가 첨단전략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제·안보, 공급망 중요도가 높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&D 추진 <p>* (반도체) 高집적·高기능·低전력화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('25~'31년) (이차전지) 차세대 이차전지(전고체, 리튬메탈, 리튬황) 기술개발('24~'28년) (디스플레이) 무기발광(iLED) 디스플레이 기술개발('25~'32년)</p>

- R&D·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 추진*

* 경제안보품목 등급, 업계 건의,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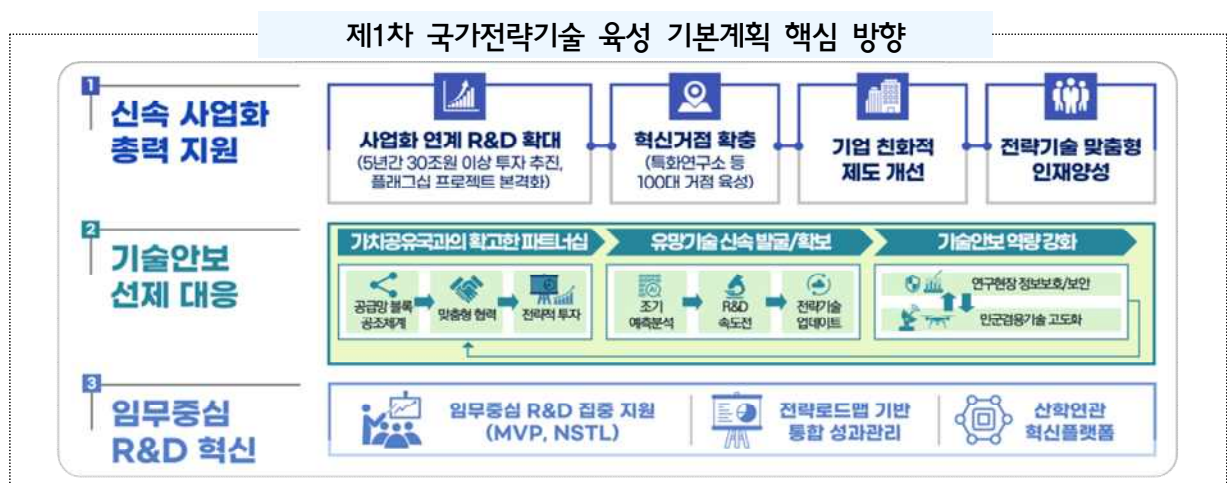
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을 지속 점검·발굴하고, 관련법상 기술로 지정하여 R&D 지원

<법상 기술지정 요건 중 공급망·경제안보 관련 사항>

①소부장 핵심전략기술	②국가전략기술	③국가첨단전략기술
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·안보적 중요성	국민경제 및 연관산업 영향, 외교안보측면 전략적 중요성	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·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
10대 분야 200개 기술	12대 분야 50개 기술	4대 분야 17개 기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국가전략기술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,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,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등 분야별 핵심 전략 수립(과기부)
 -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향후 5개년의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‘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’ 수립(‘24.8)
 - R&D투자에 더해 ▲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, ▲확고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기술안보 선제대응, ▲임무중심 R&D 혁신에 중점



- 국가적 우선순위 기술을 식별하고, 투자·평가로 연계하기 위한 12대 분야 임무지향 전략로드맵 완비(‘24.2월)
 - ※ ‘23년에 이어 거대과학(우주항공·해양, 원자력), 디지털 전환 핵심기반 (차세대통신, 로봇·제조, 사이버보안) 등 5개 분야 수립
- 시급성·중요성은 높지만, 대표 R&D 사업이 부재하던 분야를 선제 발굴, ‘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’로 선정(총 10개*, 누적 약 3조원(‘23~’33))
 - * ‘23년 발굴사업(6건)에 이어 ‘24년 4건 신규사업 발굴 10건 모두 예산 반영 완료 (예타조사 결과 기준 약 3조원 규모(‘23~’33))
- 전략기술을 보유·연구개발하는 우수기술육성주체(산학연)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(과기부) 신규 시행(‘24.5월~)
 - ※ ‘24년 1·2·3차 심사를 통해 5건 선정 (보유 2건, 연구개발 3건)

- **(소부장핵심전략기술)**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공급망 조기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1조 1,410억원 투자(산업부)
 - **(핵심전략기술)*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10대 분야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대형통합형 R&D 지원
 - * '항공기 엔진용 합금소재', '고용량 배터리용 소재' 등 6,558억원 지원
 - **(공급망안정품목)** 185대 산업공급망 안정품목 중심으로 공정혁신, 대체재 개발, 재자원화 R&D 지원
 - * '천연소재 섬유 복합재', '페플라스틱 활용 나프타 생산' 등 767억원 지원
 - **(투자연계)** 소부장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민간(VC)이 先 투자한 소부장 기업에 정부가 後 투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R&D 지원
 - * '우주 발사체용 탄소 복합재 부품 개발', '멀티오믹스 디지털 분석기기' 등 1,698억원 지원
- **(국가첨단전략기술)** 전고체·리튬메탈·리튬황 배터리 등 고성능·고안전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해 2024년 61.4억원 투입(산업부, 2024.7~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2025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정부 R&D 대폭 확대(과기부)
 - 12대 국가전략기술 : (24년) 약 5조원 → (25년) 6.4조원
 - 3대 게임체인저(AI·반도체, 첨단바이오, 양자) : (24년) 27조원 → (25년) 3.4조원
- AI·첨단바이오·양자 등 핵심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* 착수
 - * AI반도체 K-클라우드(과기, 366억원), 바이오파운드리(과기·산업, 총 113억원), 양자기술(과기, 252억원), 반도체 첨단패키징(산업, 178억원), 무기발광 디스플레이(산업, 180억원)
 - 1기 프로젝트에서 미선정된 분야(수소·첨단로봇 등)를 중심으로 3개 이내의 프로젝트(안) 신규 선정 추진
- 초격차 기술선점·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上 '전략연구사업(MVP*)'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·관리(과기부)
 - * **Mission-oriented Visionary Projects** / 근거법령 :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11조
 - 과제참여기업 현물·현금 매칭비율 완화*와 함께, 자체평가 면제(특정 평가사), 특허 우선출원, 우수성과 후속과제 지원 등 특별법상 특례 부여
 - * 매칭비율 25~50% → 20~40% / 현금부담비율 10~15% → 5~10% (특례 범위 내에서 과제별 혁신본부 검토를 통해 결정)

- 美 트럼프 2기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전략기술 체계 업데이트(과기부)
 - 신흥기술·산업트렌드, 주요국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現 체계 보완, 전략로드맵 등 임무 고도화
- 우수 산·학·연의 국가전략기술 보유·관리 또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'초격차 기술 특례'에 더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혜택 확대(과기부)
-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·이차전지·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등 추가 검토
- (소부장 핵심전략기술)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공급망 조기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1조 1,780억원 투자(산업부)
 - (소부장 기술혁신)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미래기술 선점, 초격차 핵심기술의 내재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
 - * 우주항공, 방산, 수소 등 첨단산업 유망분야 선점 및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 및 품목 R&D 지원
 - (공급망 생태계 강화) 부처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, 글로벌 R&D 참여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급망 강화 도모
 - * 과기부-산업부 'R&D 이어달리기'를 중기부까지 확대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
 - * (독일) 프라운호퍼, (벨기에) IMEC 등 선진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적극 지원
 - (3R R&D) 공급망 안정품목(185개) 등 대외 高의존 원소재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3R R&D 예타 신청
 - * 핵심 원소재의 대체(Replace), 저감(Reduce), 재활용(Recycle) 기술 개발(7년간 1조원 내외)
- (국가첨단전략기술) 중요도가 높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&D 추진(산업부)
 - (반도체) 高집적·高기능·低전력화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2031년까지 7년간 지원
 - (이차전지) 작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지속
 - (디스플레이) 2032년까지 8년간 무기발광(iLED)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기술경쟁력 기반조성)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 강화
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(IP) 기반 자금조달 지원*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,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신설**

* IP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(투자 연계시 80%, 사업화 연계시 50%)
+ IP 담보대출 부실 발생시, 회수지원기구(정부은행 공동출연)가 담보 IP를 매입 후 매각

**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해 IP 가치평가 지원을 10%p 추가 우대

-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 분석('25년 20개)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전략 수립 지원*

* 특허 보유기업 정보 등을 통해 대체 수입가능 기업 파악 및 기술개발 협력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'25년 신규 추진으로 기존 추진현황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전략기술 분야 지식재산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경쟁력 기반조성

-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대상 IP가치평가 우대지원 신설

* IP가치평가 투자 연계시 80%+10%p(우대), 사업화 연계시 50%+10%p(우대)

** ('25년도 예산반영)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: 11,400백만원

- 경제안보품목*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, 대체가능 기술, 핵심기업, 국산화 가능성 등 도출, 대응전략 수립

*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특허분석대상 품목 20개 선정

- 핵심특허 DB를 구축하고 대체 공급 기업 리스트 등 부처별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여 공급망 리스크 완화, 대체 공급망 구축에 기여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기술협력) 첨단산업 분야 주요국 등과 기술 협력 등 파트너십 확대

○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 R&D 확대*

- *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내 설립한 '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'를 통해 공동 R&D 수행
↳ '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'를 現 6개소에서 향후 12개소까지 확대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(6개) 및 공동R&D과제 선정(48개)

○ 첨단 산업분야 국내기업의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세계 최고 대학·연구소 內 한국과의 기술협력 거점 설립(6개소*)

- * 美 MIT, 예일대, 존스홉킨스대, 조지아텍, 퍼듀대, 獨 프라운호퍼 선정 ('24.4월)

○ 우리기업과 협력센터 중심의 해외 연구기관간 중장기(최대 5년)·중대형(100억) 공동 R&D 48개 선정, 원천기술 확보 추진

- 세계 최우수 연구기관 및 해외석학이* 다수 참여하는 공동 R&D 과제 선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조기 확보 지원

- * 문지 바웬디 교수(MIT, 노벨화학상 수상), 나가무라슈지(UCSB, 노벨물리학상 수상)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확대 및 신규과제 선정

○ 국제협력 필요성이 높은 첨단산업분야 중심 '25년 2개 신규 센터 추가 선정 및 우리기업과 협력센터 간 신규 공동 R&D 선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기술협력) 첨단산업 분야 주요국 등과 기술 협력 등 파트너십 확대

○ 주요 글로벌 전략기술 협의체* 등 참여를 통해 정책공조 다각화

* 바이오제약 연합(韓, 美, 日, 印, EU 등 5개국)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(바이오제약 연합) 바이오제약연합 출범

○ 韓·美·日·印·EU 등 우호국 간 필수약품 공급망 강화방안
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(바이오제약 연합) 원료공급·생산·패키징 등 이중화, 유통·운송망
스트레스 테스트 등 논의

○ 필수약품 원료수급, 생산 등 공급망 현황 및 비축현황 등
조사, 관계국 간 정보공유·협력 체계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정책·제도)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
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, R&D, 방산기술, 영업비밀 등의 엄격한 관리 및 유출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마련(과기부)

- 중앙행정기관·연구기관이 보안대책을 각각 수립 → 보안지침* (정부)과 보안대책(연구기관)으로 구분

* 과기부가 범부처 공통지침을 수립하되,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지침 수립 가능

- 보안·일반과제 → 중간 보안등급인 ‘민감과제’* 신설

* 유출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관리가 필요한 과제

- 단순 보안대책* 위반도 부정행위 간주 → 시정명령에 대해 미이행한 경우에 한해 ‘부정행위’로 명확화

* (예시) 보안교육 실시, 보안 우수자 포상기준 마련, 기관 외곽 CCTV 설치·운용 등

- 또한, 부정행위 범위를 보안과제에 한해 보안사항 누설·유출 → 보안·민감과제에서 성과 누설·유출로 확대

□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처벌 강화를 위한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 완료(산업부)

- 국회 본회의 의결(‘24.12.27), 및 공포(‘25.1.21)되어 시행예정(‘25.7.22)

*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(제9조의3), 처벌대상을 고의범으로 확대(제36조), 기술유출 벌금 상향(국가핵심기술 65억원이하, 산업기술 30억원이하)(제36조)

□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(특허청)

- 국방상 비밀특허에 대한 벌칙규정*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안
국회 본회의 의결('24.12.27), 및 공포('25.1.21)되어 시행예정('25.7.22)

* (특허법 제229조의3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민·형사 제재 및 영업비밀 침해
신고포상금 신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*

* 정진욱 의원('24.9월), 고동진 의원('24.10월), 김원이 의원('24.11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(과기부)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공청회(2월), 범부처 보안지침, 보안
등급 분류 가이드라인, 현장매뉴얼 등 마련

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관련 절차 및 제출 서류 등
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개정 추진(~25.7월)

-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, 변경등록, 등록말소 관련 절차와
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고, 시행규칙에 관련 신청서식* 신설

*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, 등록변경신청서, 등록증명서, 등록말소신청서

□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(특허청)

- 국방상 비밀특허에 대한 벌칙규정*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
특허법 공포('25.1.21.) 및 시행('25.7.22.)

* (특허법 제229조의3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민·형사 제재 및 침해 신고포상금
신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정책·제도)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
 -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('24.4월)에 따라,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정황 포착 → 방첩기관 공유 및 수사로 연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기술유출방지 정보분석에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의 집합체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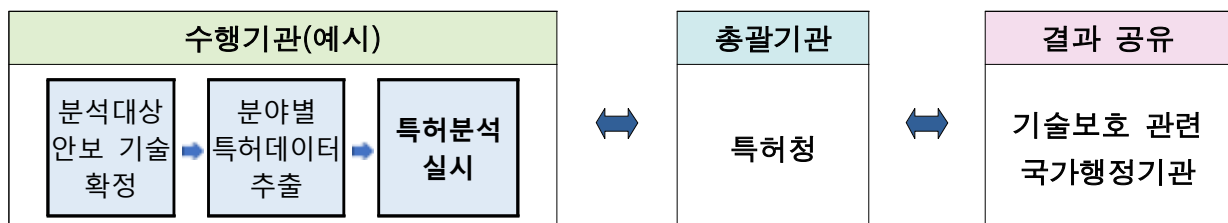
* 기술유출방지 목적의 특허빅데이터 활용 근거 등 산업재산정보법 제정('24.2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- 기술유출방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노릴 만한 위험영역(기술분야, 보유기관 등) 도출

* ('25년도 예산반영) 기술유출방지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업: 2,193백만원

< 「기술유출방지 특허빅데이터 분석」 추진 체계 >

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정책·제도)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

○ 스타트업·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바우처* 지원 확대**

*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·운영, 기술보호 컨설팅·교육 등 지원

** 스타트업(창업 7년 이내)은 한도 1천만원, 보조율 10%p 추가 적용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(기술보호 바우처 도입)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보조율 최대 90%, 지원금액 최대 7천만원의 바우처 도입

*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·유망·선도기업으로 구분하여 한도 (3~7천만원) 및 보조율(50~90%) 차등 적용

** 지원실적: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(85건), 손해액산정(11건), 정책보험(19건)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바우처 지원 시 스타트업 등 초보단계 기업의 지원 비중을 50% 이상으로 확대

* 초보: 40%/유망: 30%/선도: 30% → 초보: 50%/유망: 30%/선도: 20%

4

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

【 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】

4-1 공급망안정화 대외전략 추진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① 적극적 대외정책 수립				
○ 對한국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의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정기·수시적 개최				외교부
○ 글로벌 사우스 투자수요에 맞춤형 지원 추진				산업부·기재부 등
② 공급망 협력과 통상정책간 연계				
○ 자원부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 지속				산업부
○ 인도·태평양 지역국과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글로벌 사우스 전반의 광물협력 파트너십 구축				산업부
③ 경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급망 강화				
○ ODA 전략 목표 수립시 대외정책과 연계 강화				국조실 (관계부처)
○ 중점협력국 선정시 공급망 협력가능성 고려				국조실 (관계부처)
○ ODA 자금으로 공급망 관련 잔후방 사업 지원 검토				기재부·외교부 등
○ 공급망 강화 기여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				기재부

4-2 양·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양자 협력 파트너십 강화				
①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의 공급망 협의체 추진				
○ 경제협의체 신설 및 장관급 격상				기재부·산업부· 외교부
○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심 해외인사풀 구축				

② 공급망파트너십(SCPA) 체결		
○ 핵심협력국과 맞춤형 공급망 협력체계 확산		산업부
③ 양자간 공급망 협력 고도화		
○ 인접국과 핵심광물 공동생산, 주요품목 공동 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		산업부
○ 위기대비 합동 모의훈련 등 비상시 협력 강화		기재부 (관계부처)
2. 다자 네트워크 활용		
① IPEF 공급망 협정 이행		
○ 소위원회·분야별 액션플랜팀 적극 참여		산업부 (관계부처)
○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적 추진		
○ 주요 회원국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		
② MSP 통한 협력 확대		
○ 기존 사업 성과 창출 및 신규사업 확대 주도		외교부 (관계부처)
○ 우리기업 진출 가능 MSP 사업 발굴 확대		
③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활용		
○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등 지원		기재부 (관계부처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적극적 대외정책)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구조 마련

- 상대국 입장에서 對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(기술, 소부장 등)을 식별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'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'를 통해 관계부처, 민간 전문가 간 우리 전략기술 등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 점검('25.上~)

-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과 협력 강화방안 검토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적극적 대외정책)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구조 마련
 - 주요국의 법·제도 변화 분석 및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여타국 입법·행정조치 등의 우리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
 -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정기·수시 개최하여 주요국 법·제도 변화 동향 파악 및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25개 EWS 재외공관 대상 「제5차 경제안보담당관 화상회의 개최(‘24.10.31일)」
 - 주제 : 재외공관 EWS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
 - 참석자: 외교부 본부, 기재부, 25개 EWS 공관 경제안보담당관 등

3. 2025년 시행계획 (제도)

- 상·하반기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회의 개최 및 필요시 지역별 경제안보담당관회의 별도 개최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적극적 대외정책)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구조 마련
 - 주요국의 법·제도 변화 분석 및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여타국 입법·행정조치 등의 우리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
 - KOTRA 공급망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 투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자문, 정보제공 등 지원 추진
- * 주요 현지투자 프로젝트는 인력·비자·인허가 등 밀착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업계 수요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공급망 정책·규제 대응 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통상정책과의 연계) 핵심광물·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
 - 자원부국인 몽골, 세르비아 등과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 조기 타결 등을 위한 협상 지속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희토류·텅스텐 등 핵심광물 보유국 몽골과 3차례 EPA 공식협상 개최('24.5월, 9월, 12월)를 통한 논의 진전
- 니켈·흑연 보유국 탄자니아('24.6월) 및 리튬 부국 세르비아('24.9월)와 EPA 협상 개시
 - * 탄자니아: 이차전지 핵심원료 니켈(Kabanga 광산 : 152만톤 매장), 흑연(Bunyu 광산 : 4.6억톤 매장) 풍부
 - * 세르비아: 리튬 매장량 약 120만톤,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%

3. 2025년 시행계획

- 한-몽골 EPA 협상 성과 도출(연내) 및 탄자니아, 세르비아 등과 협상 진전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통상정책과의 연계) 핵심광물·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
 - 공급망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·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양·다자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

2. 2024년 추진실적

- (양자) 필리핀·태국·말련 등 인태 주요국과 통상 네트워크 강화
 - 한-필리핀 FTA 발효(12월)를 통해 니켈,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
 - 한-태국 EPA 협상 개시(3월), 한-말련 FTA 협상 재개(3월) 통해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통상협력 확대
- (다자) IPEF·APEC 등 다자협의체의 공급망 협력 논의 주도
 - IPEF 필라2·3 발효(4·11월), 핵심광물대화체 참여 등을 통해 미·일 등 14개 인태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고도화
 - APEC 통상각료회의(5월, 페루) 계기 공급망 협력 확대 합의

3. 2025년 시행계획

- (양자) 인태 국가(태국, 말련 등)들과의 FTA·EPA 협상 진전
- (다자) IPEF 공조 강화, APEC 개최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 주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통상정책과의 연계) 핵심광물·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남미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

○ 핵심광물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“광물협력 파트너십” 구축

* (예) 베트남, 인니, 카자흐스탄, 탄자니아, 칠레 등 주요 광물 부국에 광물자원 역량강화 사업,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등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글로벌 사우스 內 핵심광물 보유국과 핵심광물 MoU 체결 등 우리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

○ '24년 핵심광물 협력 MoU 6건* 체결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핵심광물 MoU 既체결국과의 워킹그룹 회의 개최* 등 협력 지속 및 신규 협력대상국 발굴

1. ODA의 전략적 활용

- ☐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 우리 대외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ODA 전략에 반영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TF 운영을 통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'26~'30) 수립 추진
- (연구용역) 대내외 환경 분석, 제3차 기본계획 이행 평가,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
 - (관계기관 T/F) 기본계획 수립 총괄·관리 및 쟁점 조율 등
 - * 국조실(주관), 기재부·외교부 및 수출입은행·KOICA 참여
- ☐ 세부 추진과제 포함 초안 마련 → 각계 의견수렴 및 보완(9~11월)
→ 「제4차 ODA 기본계획」 마련(12월)

1. 중점협력국 제도

- (ODA의 전략적 활용)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 우리 대외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ODA 전략에 반영
 - 중점협력국 선정 시 수원국의 발전 수준,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·경제안보 등 경제·통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4기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 추진

- ‘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 방안’ 연구용역 시행(‘25.3~.9월)
-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수립 시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반영 추진(‘25.말)
- ODA 주관부처(기재·외교부) 협의 등을 통해 4기 중점협력국 선정(‘26.초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경협사업 연계) 공급망 안정을 고려한 ODA 정책 추진, 해외 개발사업 지원 정책금융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
- (ODA의 전략적 활용)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 우리 대외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ODA 전략에 반영
 -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망 관련 전·후방 사업 지원(도로, 물류, 에너지 등)을 검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(패키지 지원) EDCF, 공급망 기금, 정책금융, KSP를 결합한 K-파이낸스 패키지*로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
 - * (예) 광산개발 투자(공급망 기금) + 정책 자문(KSP) + 관련 인프라 지원 (EDCF) + 광물 가공·생산(정책금융)
- ☐ (우선순위 반영) EDCF 후보사업 발굴·개발 및 수원국 협의시 공급망 협력사업 우선 추진
 - EDCF 정책협약에 우리 공급망 기금 및 수원국의 공급망 유관 부처도 참여하는 등 상호연계를 강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경협사업 연계) 공급망 안정을 고려한 ODA 정책 추진, 해외 개발사업 지원 정책금융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
 - (K-Finance Package) 자원개발 등 공급망 강화 기여 프로젝트에 ODA 및 기타 정책금융 간 패키지 지원
 - * (예) 사업발굴·자원개발 정책 수립(KSP, KOICA) + 인프라건설(EDCF, EDPF) + 광물 자원 개발(공급망기금) + 정·제련, 가공공장 구축(수출금융 등 정책금융)
 - 핵심자원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초대형 패키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공급망안정화기금과 EDCF 간 연계 지원 가능 국가 종합 검토
 - * 핵심 원자재 보유 여부, 선도사업자 진출 수요, EDCF 협력 현황 등을 고려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공급망 프로젝트와 EDCF, KSP 등의 연계 추진

〈 자금 연계 예시 〉

- ▶ (무상 ODA) 핵심 자원 개발·관리 및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정책 등 국가별 정책수립·컨설팅 및 타당성조사 등 지원(KSP, KOICA 등)
- ▶ (유상 ODA) 핵심광물 등의 이동에 필수적인 송전망·도로·철도·항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(EDCF, EDPF)
- ▶ (공급망기금) 광물 구매계약 체결·현지 광산기업 지분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또는 직접 지분 투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협약체)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경제관련 협약체* 미설치 국가들과 협약을 신설하고 기존 협약체 장관급 격상 검토

* (現) 1급 이상이 수석대표인 외국정부와의 경제관련 협약체는 71개국 156개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공급망 관련 접촉 필요 국가 및 협력 논의 가능한 의제 분석

* 공급망안정화에 핵심적인 주요 품목 보유국 리스트업 및 해당 국가 부존자원 현황, 협력 유망 분야, 정치·경제 이슈 등 既분석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기존 경제관련 고위급 협약체 개최시 공급망 논의 추진

* 금년중 제3차 한-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, 제2차 한-인니 고위급 투자대화, 제6차 한-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의 예정(날짜 미정)

- ☐ 품목 중요도, 양자관계 등 고려하여 협약체 신설 필요 국가 선별

- ☐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 실무자 간 면담 진행하는 경우 양국간 고위급 대화 추진 관련 적극 협의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 협의체)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경제관련 협의체 미설치 국가들과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협의체 장관급 격상 검토
 -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부, 의회, 산업계, 여론주도층 등 주요 해외인사 풀 구축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주요 협력국 행정부와 각국 공급망 정책 거버넌스를 주제로 면담 진행 및 공급망 관련 협력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마련
 - 일본 내각부, 재무성과 면담 및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공급망 정책 총괄 부서와 면담 진행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화에 핵심적인 협력국과의 정례적 양자 면담 추진을 통한 컨택 포인트 확보 및 기존 협력관계 강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SCPA*) 주요국과 공급망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미래 중점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등 공급망 협력체계 마련

*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

- 핵심협력국과 교역·산업협력 구조 등을 고려한 공급망 협력을 확산하여 실질적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

구분	주요 내용
위기전	▪ 위기 감지시 핫라인을 통해 정보 공유 등 사전 통보
위기사	▪ 공급망 교란 상황 시 긴급회의(5일 내)를 개최, 품목 재고 등 지원 방안 논의, 필요시 공동으로 제3국 조달 모색 등 협의
분야별 협력	▪ 핵심광물·에너지 등 핵심 협력분야 부속서 마련, 협력분야 합동 모의 훈련 실시

2. 2024년 추진실적

- 한-싱 공급망파트너십 체결('24.10.8, 한-싱 정상회의 계기 체결)
-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SCPA로서 물류 및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

3. 2025년 시행계획

- 한-싱 공급망파트너십 이행 협의 개최(연 1회)
- 공급망 안정화 분야 위주로 호주, 인니 등 협력 대상국 확대 추진
-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상대국 관심도에 따라 체결국 조정 및 확대

4-[2]-1-3-①

인접국과 핵심광물 공동생산, 주요품목 공동
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협력 고도화) 공급망 관련 양자간 실질적 협력 방안 도출

- 일본·싱가포르 등 인접국과의 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,
주요 품목 공동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

* (예) 한국과 일본은 멕시코 LNG 기지 공동 건설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한-일 광물자원협력대화(한산업부-일경산성)를 개최하여 실질적인
협력방안 모색('25.2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협력 고도화) 공급망 관련 양자간 실질적 협력 방안 도출

- 공급망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비상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체계 마련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양자간 위기대비 합동 모의훈련 추진 현황은 없으나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(CRN)를 통해 다자간 합동 훈련* 실시(9.13일)

* 산업용 요소 수입 차질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및 공동대응 시뮬레이션 진행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다자간 합동 훈련 경험을 기반으로 주요 협력국과 양자간 위기 대비 합동 모의훈련 등 위기 시 실질적 협력 방안 확대

- 일본, 호주, 베트남 등 공급망 협력 관련 주요국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형성
-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 시 위기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실질적인 비상시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포함하여 진행

4-(2)-2-1-①
4-(2)-2-1-②
4-(2)-2-1-③

IPEF 소위원회 · 분야별 액션플랜팀 적극 참여
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적 추진
주요 회원국과의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IPEF*) 공급망위원회, 위기대응네트워크(CRN**) 등 이행기구를 통해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위기시 대응 공조 지속

*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/ ** Crisis Response Network

○ 소위원회 및 분야별 액션플랜팀*을 활용하여 복원력 제고 추진

* 물류·데이터분석 소위, 반도체·핵심광물·화학·보건 액션플랜팀 설치

○ CRN 의장국으로서 역내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화(연 2회)

○ 일본·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우리나라는 공급망 교란 발생시 긴급회의 소집 및 대응하는 CRN 의장국을 1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수입('24.7월)

○ △신속 대응체제 구축, △위기대응 정책 역량 제고, △CRN 운영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중심 임기 2년간 업무계획 수립

○ 정례회의 개최 및 첫 대면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('24.9월)

□ IPEF 공급망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액션플랜팀 설치 및 업무계획 수립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IPEF CRN 의장국으로서 IPEF 역내 공급망 협력 주도 지속하며 연 2회 정례회의 및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최

□ IPEF 공급망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액션플랜팀에 적극 참여하며 분야별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도출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MSP*)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의장국으로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기업 지원 강화

*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

- 기존 사업 성과 창출* 가속화 및 신규 MSP 사업 확대 검토

* 탄자니아 Mahenge 흑연사업: MSP 최초 성과사업으로 집중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MSP 수석대표회의(24.9월) 및 히토류 사업 심층회의(24.12월) 개최

- MSP 수석대표회의 계기 7대 주요 성과사업 최초 대외 발표 (24.9월) 및 MSP 사업 증가

《 MSP 사업 증가 》		
○ 현재 MSP 사업 39개 진행 중(24.7월 23개 → 39개로 확대, 약 70% 증가)		
《 주요 7대 사업 》		
① 잠비아 Mingomba 광산 구리 탐사 ② DR콩고 Gecamines社 Umicore社 게르마늄 가공·재활용 ③ 탄자니아 Mahenge 광산 흑연 채굴 ④ 캐나다 Electra社 코발트 제련 ⑤ 미국 ESS社 배터리 생산 ⑥ 호주 ASM社 히토류 채굴(Dubbo 프로젝트) ⑦ 호주 QPM社 니켈 채굴 및 가공(TECH 프로젝트)	24년초	24년말
	23개	39개

- 히토류 사업 심층회의를 통해 MSP 히토류 사업 현황·도전과제 관련 논의 주도

※ △히토류 관련 2개 MSP 사업(호주 Arafura社 히토류 사업 영국 Hypromag社 히토류 재활용 사업) 관련 협력방안 논의 △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석탄재 히토류 재활용 기술 발표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- 한-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개최(25.2)

- 2025년도 MSP 수석대표회의 개최

- 주요 양자 면담 및 국제행사 계기 MSP 관련 아웃리치 전개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MSP*)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의장국으로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기업 지원 강화

*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

- 우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의 MSP 사업 편입 추진 및 우리 기업 진출 가능 사업 발굴 확대

* 희토류 재활용 기술 선진국(영국 등) 협력, 몽·베·중앙아·아프리카 등 협력 사업 검토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우리 기업 MSP 사업 투자 지원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공급망안정화기금,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MSP 사업* 지원 확대 모색
- ☐ 탄자니아 Mahenge 흑연사업* 착공식 개최 지원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국제금융기구)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급망 강화
관련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등 지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 채널*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
공급망 관련 사업들이 발굴·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 지속(상시)

* ADB e-Asia 기금 등

5

추진기반

【 기본계획상 주요 과제 】

5-1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				
○ 개별부처 소관 공급망 관련 주요정책 조율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○ 3개 전문위 역할 및 기능 강화				
② 공급망 3법				
○ 공급망위·소부장위·자원안보협의회 간 연계 강화 위한 통합워킹그룹 구성				기재부 (산업부)
○ 개별법률 근거 시스템간 연계 강화				기재부 (관계부처)
③ 민관협력 네트워크				
○ 수출입은행 내 “공급망 분석팀” 신설				기재부 (수출입은행)
○ 공급망정책연구포럼 개최				기재부
④ 공급망 싱크탱크				
○ KDI에 공급망 전담연구조직 마련				기재부 (KDI)

5-2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재·부품·장비 특별회계

추진 과제	추진 기한			소관부처
	'25	'26	'27	
1. 공급망안정화 기금				
① 지원규모				
○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				기재부
○ 기금채권발행(국가보증)을 통한 재원 마련				기재부
② 지원대상				
○ 선도사업자 중심 + 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 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 인정하는 사업				기재부
○ 선도사업자 우대금리 적용, 중소기업 추가 우대				기재부
③ 지원방법				
○ 직·간접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에 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				기재부
○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 및 간접투자 상품 지속 발굴				기재부

③ 국내·외 정책금융기관간 연계		
○ 「공급망 우대 보증프로그램」 신설	<div></div>	기재부
○ 「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」 설치	<div></div>	기재부
○ 美 DFC, 日 JBIC, 濠 EFA 등 해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	<div></div>	기재부
④ 운용기반 구축 및 리스크 관리		
○ 기금지원 면책제도 마련(법령 개정)	<div></div>	기재부
○ 기금 조성기간 완화(법령 개정)	<div></div>	기재부
○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	<div></div>	기재부
2.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		
① 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		
○ 소부장 특별회계 설치·운영 기한 연장	<div></div>	산업부 (기재부)
○ 회계규모 확대 검토	<div></div>	
② 명칭 변경		
○ “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 명칭 변경	<div></div>	산업부
③ 용처 다변화		
○ R&D 중심의 지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으로 용처 확대	<div></div>	산업부·기재부
④ 공급망기금 연계		
○ 소부장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간 연계 강화	<div></div>	산업부·기재부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공급망안정화 위원회)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한 공급망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 등 공급망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
- 공급망위원회를 통해 개별 부처 소관 공급망 관련 주요정책 조율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'24년 세 차례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9개의 안건을 상정·논의

- (1차) ①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②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지정(안), ③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
- (2차) ①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, ②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(안), ③공공비축 현황 및 '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 등
- (3차)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등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분기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를 통해,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부처별 주요 정책들을 적기에 상정·논의 추진(상시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공급망안정화 위원회)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한 공급망 관련 정책의 총괄·조정 등 공급망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 - ①경제안보 품목·서비스전문위, ②비축전문위, ③대외경제전략 전문위 등 3개 전문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
 - 공급망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논의·검토, 분야별 신규 논의 필요 과제 및 정책 발굴, 각 부처 비축예산 사전 논의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전문위 출범('24.9월) 이후 각 두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여, 정책 과제 발굴 및 본 위원회 논의 안건 사전 검토 등 시행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각 전문위원회를 통한 신규 논의 필요과제 및 정책발굴 확대(상시)
 -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전문위 중 선임위원회로 지정하여, 본 위원회 안건 사전 논의·심의 기능 강화
 - 5월 중 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비축관련 각 부처 '26년 예산 요구안 사전 논의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☐ (공급망 3법*) 공급망 정책간 일관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
공급망 3법 관련 협의·조정기능 활성화

* ①공급망안정화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 ②소부장특별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
③자원안보특별법(위원장: 산업부장관)

○ 공급망안정화위원회,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자원안보
협의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워킹그룹* 구성

* (예)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,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·자원산업정책국장
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대화채널 마련 등

- 워킹그룹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공동설정하고 기본계획
등 주요 정책 수립시 협의채널로 활용

2. 2024년 추진실적

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☐ (구성) 기재부·산업부 공급망 3개국* 국장급으로 구성(상시)

*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,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·자원산업정책국장

○ 3국장간 정기* 회의(예시: 월별) 실시

- 공급망 관련 업무현안 및 상호 협조요청 사항 공유 등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3법*) 공급망 정책간 일관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
공급망 3법 관련 협의·조정기능 활성화

* ①공급망안정화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 ②소부장특별법(위원장: 경제부총리),
③자원안보특별법(위원장: 산업부장관)

- 개별 법률에 근거한 조기경보체계·시스템* 간 연계가 가능
하도록 시스템 설계 초기단계부터 협업 추진

*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, 자원안보법상 국가자원안보통합
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기재부 공급망 조기경보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(~'25.12월) 추진
과정에서 부처별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실무 협의 지속('25.3월~)

- EWS간 연계를 위한 지침 수립 및 워킹그룹* 운영

* 기재부(용역사)-기진회-해외자원개발협회 간 실무협의 추진 등

- 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과
여타 조기경보체계·시스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추진(산업부)

* ('26년) ISP 수립 → ('27년) 시스템 구축 예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민관협력 네트워크) 공급망 연구·분석* 기능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마련

* 산업별 공급망 글로벌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
-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단 내 “공급망분석팀”을 신설하고,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간사 역할 수행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심도있고 전문적인 공급망 관련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수은 내 박사급 인력(별정직) 채용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수은 공급망기금단 內 공급망 분석팀 출범('25.1월)
 - 공급망 분야 동향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→ 주요국 수출통제 등 긴급한 위기상황 대응 및 기금 지원 효과성 제고
 - 공급망 분석팀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별·산업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·운영('25.4월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민관협력 네트워크) 공급망 연구·분석* 기능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마련

* 산업별 공급망 글로벌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

- 공급망정책연구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학계·산업계 인사들간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

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학계·산업계 및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급망정책 연구포럼 개최('25.上)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(공급망 싱크탱크) 글로벌 공급망 규범 변화에 대응한 공급망 정책 수립·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KDI에 전담연구조직 마련 추진
 - 중장기 지속발전 전략과 공급망 정책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·기술·대외 정책 등 종합적 공급망 정책연구 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해당 없음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KDI 내 공급망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팀 신설('25.上)
 - 산업·분야별 국내 공급망 현황 분석 및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정책이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량 분석 등 실시

5-[2]-1-1-①
5-[2]-1-1-②

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
기금채권발행(국가보증)을 통한 재원 마련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지원규모)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
첨단산업·자원안보·필수재·물류 등 공급망 핵심분야 중점 지원

○ 공급망채권 국가보증*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 마련

* '25년도 10조원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계류중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'24.9월 공급망기금 공식 출범 이후, 첨단전략산업, 자원안보
등 분야의 총 22건 사업에 대해 2조 1,119억원 지원 승인

□ '25년도 총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
증동의안 국회 통과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국가보증한도(10조원) 내에서 기금채권을 적기 발행하여 기금
재원을 조성하고, 공급망 핵심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

○ 공급망기금채권을 10년 이내 다양한 만기로 발행(원화+외화)
하고, 필요시 수은 여유자금 일부를 단기로 차입

○ 대출·보증을 중심으로 지원하되, 직·간접 투자 등 지원수단 다각화
- 민관협력 기반하에, 에너지공단, 무보 등과 연계한 공동투자·
대출·보증 등 패키지 지원 추진

□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의결을 통해 '26년도 10조원(잠정) 규모 기금
재원 마련 추진('25.9월, '26년도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제출)

5-[2]-1-2-①

5-[2]-1-2-②

선도사업자 중심 + 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위원회
기금운용심의회 인정하는 사업
선도사업자 우대금리 적용, 중소기업 추가 우대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지원대상)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, 관계부처·공급망안정화위원회·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*도 지원

* 선도사업자의 협력기업, 부처별 지정사업, 공급망위원회·기금심의회 의결 사업 등

- 선도사업자는 우대금리 적용 등 중점 지원,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

2. 2024년 추진실적

- 99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*하고, 공급망기금을 통해 2조 119억원(21개 기업) 대출 승인

* 선도사업자 99개사 중 대기업 25개, 중견기업 30개, 중소기업 42개사

- 공급망기금 대출 시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*를 적용하고,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우대금리(기금마진 최소화) 적용

* 대기업 최대 △0.8%p, 중견기업 최대 △0.9%p, 중소기업 최대 △1.0%p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선도사업자의 협력기업, 부처별 지정사업, 공급망위원회·기금심의회 의결 사업 등도 공급망안정화 효과를 감안하여 적극 지원

- 공급망기금과 신·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'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'('25.1월 신설)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 경감

〈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(안) 〉

① 지원대상 : ①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 중소·중견기업, ②안정화사업의 협력기업

② 보증규모 : ('25년) 최대 2천억원 → ('26년~) 보증규모 확대 추진

- 우대 보증 대상기업에게는 별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기업 금융비용 경감

5-[2]-1-3-①
5-[2]-1-3-②

직·간접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투자 전담조직 신설
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 및 간접투자 상품 발굴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지원방법) 대출, 보증 외 직·간접 투자 확대 등 지원수단 다각화
 - 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직접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심사 역량 강화, 해외 핵심광물 확보 등 지분투자 수요에도 적극 참여
 -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1조 원* 규모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 ('25년 상반기중 결성) 및 주요 산업별 간접투자** 상품 지속 발굴
- * 1조 원 = 공급망기금 1천억 원 + 수은 1천억 원 + 민간출자 8천억 원
- ** (예)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(지분확보, 법인설립 등)에 기금이 공동으로 투자 하는 프로젝트 펀드 조성 등
- 창의적 기업지원 수단 개발을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

2. 2024년 추진실적

- 창의적 기업지원 수단 모색을 위해,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'기금 투자업무 자문단' 결성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수출입은행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('25.7월)하고 외부 투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투자업무 양적·질적 고도화 도모
 -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, '핵심광물 투자 협의회*'를 구성하고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추진
- * 제1차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 개최('25.2.18일, 기재·산업·외교부, 수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 등 참여)
- 총 1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사모펀드* 상반기 중 결성
- * 1조 원 = 공급망기금 1천억 원 + 수은 1천억 원 + 민간출자 8천억 원
-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(현지법인 포함)에 3천억원 이상 투자
- '24.12월 운용사 선정(IMM인베스트먼트,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, 코스톤 아시아,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) → '25년 상반기 중 펀드 결성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기관간 연계)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지원 등을 통해 자금지원 효과 제고

○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*를 통해 연계·협업 추진

* 수은(간사)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무보, 해진공, 코트라(소부장 공급망센터), 중진공

-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기금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'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' 신설하여 기업의 여신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수은-신보-기보 기관 간 실무협의(10. 23일) 등을 거쳐 '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' 체결(12. 31일)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 신설·시행('25. 1. 23일)

○ (절차) ①^{기업}기금신청 → ②^{수은, 산, 기보}사전협의 → ③^{수은}심사, 기금심의회 의결 → ④^{수은}보증 추천 → ⑤^{산, 기보}보증심사, 보증서 발급 → ⑥^{수은}대출 실행

○ (대상) ① 선도사업자, ② 선도사업자 안정화사업의 협력기업, ③ 기금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 기업

□ (운용) '25년은 최대 2천억원 보증, '26년부터 보증규모 확대 추진

○ ('25년) 산·기보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천억원(신보 1,500, 기보 500) 규모 운용

기관	보증 프로그램	보증 조건	'25년 보증규모
신용보증기금	공급망안정화 우대 보증	보증비율 최대 85%, 보증료율 우대 최대 0.4%	1,500억원
기술보증기금		보증비율 최대 85%, 보증료율 우대 최대 0.4%	500억원

- 보증 + 추가 금리우대 등을 통해 최대 1.5%p 금융비용 경감

○ ('26년~) 기업 자금수요,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증규모 확대 추진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□ (기관간 연계)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지원 등을 통해 자금지원 효과 제고

- 수출입은행에 「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」를 설치하고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 종합 안내*

* ①프로그램 연계·협업 발굴, ②컨설팅 및 프로그램 주선, ③현황·실적 등 통합관리 등

- 美 DFC, 日 JBIC, 호주 EFA 등 해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광물 확보 등 공동투자 프로젝트 발굴·추진

2. 2024년 추진실적

□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* Kick-Off 미팅('24.9월)을 통해 공급망 분야 정책금융기관간 협력채널 마련

* 수은(간사)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무보, 해진공, 코트라(소부장 공급망센터), 중진공

3. 2025년 시행계획

□ 수출입은행에 「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」 설치 추진('25.7월)

-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(공급망 우대보증 등) 종합 안내 및 정책기관 협의체 안전 발굴, 실적 관리 등 수행

□ 美 DFC, 日 JBIC, 호주 EFA 등 해외기관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협업사업 발굴·추진

-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핵심광물(흑연, 희토류 등)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 등 모색

5-[2]-1-5-①
5-[2]-1-5-②
5-[2]-1-5-③

기금지원 면책제도 마련(법령 개정)
기금 조성기간 완화(법령 개정)
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(운용기반) 제도 정비 및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용기반 구축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*함으로써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
 - * '기간산업안정기금'의 경우 산업은행법(제41조)에 면책조항 기 도입
 - 기금지원·재원확보의 불확실성 해소 및 기금채권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조성기간* 제한 완화를 검토
 - * 공급망안정화법 부칙 제2조 : 기금의 조성기간을 5년(~'29.6.27)으로 한정
 - 기금 손실관리기준금액 및 투자한도를 설정하고, 5대 리스크(신용·환·금리·유동성·운영)에 대한 맞춤형 지표 설정·관리

2. 2024년 추진실적

- 기금 리스크관리 내규 제정 및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('24.7월)
 - 기금의 손실관리기준금액 및 투자한도를 설정하고, 리스크 부문별 맞춤형 관리 실시

3. 2025년 시행계획

-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*에 대한 국회 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기금지원 면책제도 마련, 기금 조성기간 제한 완화 추진
 - * '25.1월, 김상훈 의원실 발의 : ①공급망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, ②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처벌근거 마련, ③공급망기금 조성기간 연장
- '25년도 기금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수립('25.2월)을 통해, 기금 신용한도 설정 및 리스크 부문별 세부 관리방안 수립·이행

5-[2]-2-①-①

5-[2]-2-②-①

5-[2]-2-③-①

5-[2]-2-④-①

소부장 특별회계 설치·운영기한 연장
및 회계규모 점진적 확대

소부장 특별회계 명칭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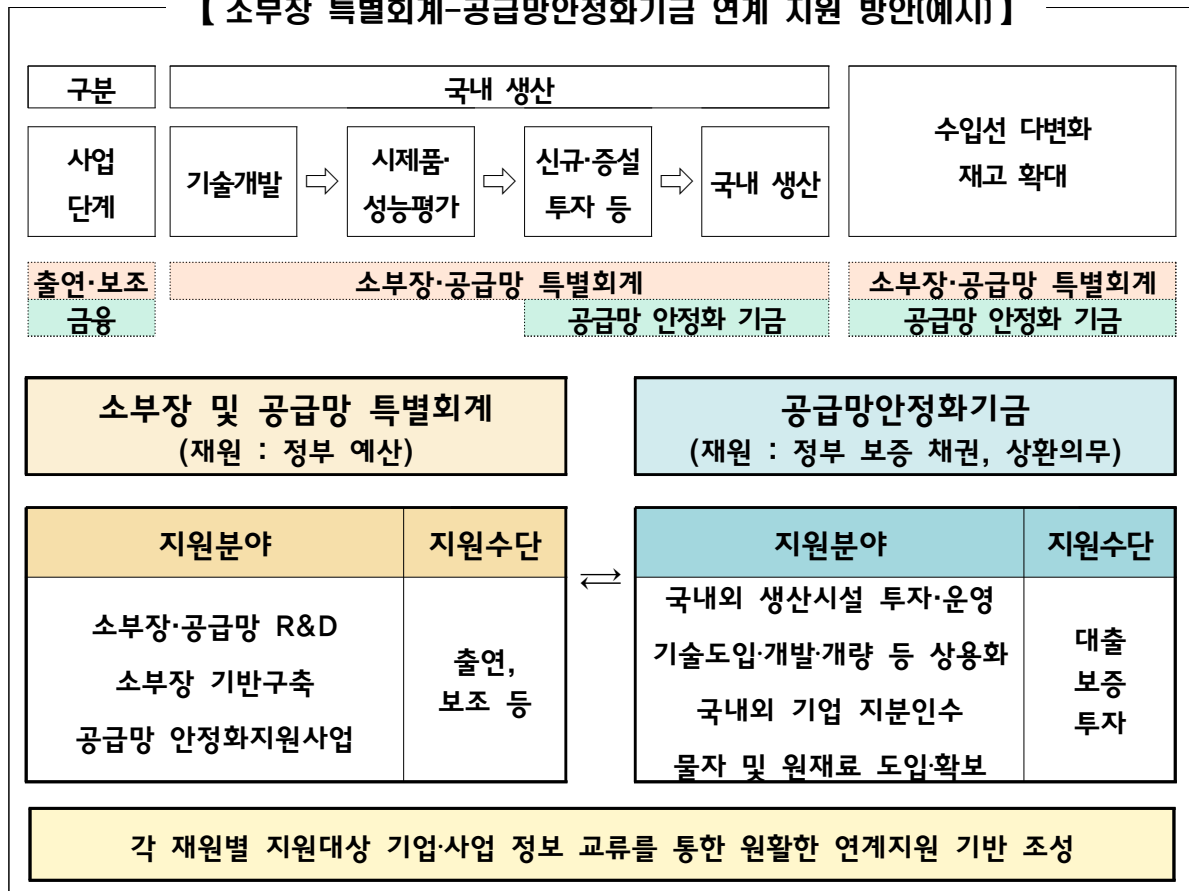
소부장 특별회계 용처 다변화

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간 연계 강화

1.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- ☐ **(일몰 연장 및 규모 확대)** 소부장 특별회계 설치·운영 기한* 연장
(소부장 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, '24.12) 및 회계규모 점진적 확대
* (現) '24.12.31일 → (改) '29.12.31일
- ☐ **(명칭 변경)**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를 위해 “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 명칭 변경
* (現)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
- ☐ **(용처 다변화)** R&D·기반구축 중심의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분야를 공급망 안정 및 수입 위험 완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
- ☐ **(공급망 기금과 연계)** 정부 출연·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용자·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상호 연계

【소부장 특별회계-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 지원 방안(예시)】



2. 2024년 추진실적

- ☐ 특별회계 일몰 연장('24.12.31일 → '29.12.31일) 및 명칭 변경('24.12월)

3. 2025년 시행계획

- ☐ 특별회계 내 수입선 다변화(제3국산 차액보조 등), 국내생산 등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반영 추진(기재·산업부)
- ☐ 특별회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 개발 성과물이 사업화 단계에 진입 시, 공급망 기금(융자, 지분투자)과 연계 지원(기업 수요 발생 시)